

정·책·담·당·자·가·만·드·는·경·제·전·문·지

나라경제

2001. 11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정 책

2001년 세제개편안

해 설

정보격차 해소로 '디지털 복지사회'를

◀ 이 달의 초점 ▶ 주 5일 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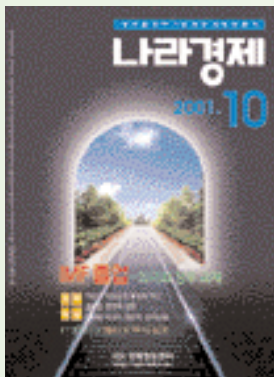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2001년 11월 1일 발행 · 제12권 제11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문화 리 0488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면동 207-41 전화 (02)958-4114 · 광고 ISSN 1227-8033 11

나라경제

2001년 11월호
 통권 제132호



2001년 10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 4 **권두칼럼**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지식정보사회를
 /배순훈·前 정보통신부장관
-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유대형
- 10 **만남** 세일즈 외교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vs 김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특집 2002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6 2002년 예산, 이렇게 본다/이만우·고려대학교
- 21 2002년 예산, 이렇게 본다/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 25 경제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확대/배국환·기획예산처
- 30 SOC투자 확충으로 경제활성화 뒷받침/서종대·건설교통부
- 35 수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오일환·산업자원부
- 40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남궁민·정보통신부
- 44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박현열·보건복지부
- 49 R&D 투자의 지속적 확충/조윤래·과학기술부

이 달의 초점 '주5일 근무제' 도입

- 56 '근로시간 단축' 과 '생산성 향상' 동시에 이루어져야/김황조·연세대학교
- 60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김장호·숙명여자대학교
- 63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동시에 추진돼야/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 66 기업의 노무비 증대 영향 크지 않다/노진귀·한국노동조합총연맹
- 70 도입 시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하다/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 73 **새로 나온 책**
- 76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허경만 전라남도지사
- 82 **'동북아의 중심' 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남도**/성무열 · 전라남도

세계경제의 현장

- 86 **경제통합 촉진될 유로圏**/양돈선 · 駐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경제수상**
- 90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려면**/김종갑 · 산업자원부
- 92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 정비**/김석원 · 금융감독위원회

경제정책해설

- 96 **2001년 세계개편안**^{노형철 · 재정경제부}
- 101 **일선 농 · 축협의 건전 발전 도모**^{/이양호 · 농림부}
- 104 **정보격차 해소로 '디지털 복지사회' 를**^{/류수근 · 정보통신부}
- 109 **과학고 2개교를 영재학교로 전환**^{/김차동 · 과학기술부}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3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로 예산절감**^{/노병균 · 정보통신부}
- 경제동향**
- 117 **테러사태로 美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강문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업정보**
- 12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김석호 · 공정거래위원회}

나라경제 광장

- 125 **'3D' 용어사용 부적절하다**^{/조영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128 **경제만화 공적자금(1)**^{/재정경제부}
- 136 **한국경제에 관한 외신보도 동향**
- 140 **주요 경제지표**



만남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VS 김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강봉균 · KDI 원장

편집인/조성익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담당장

편집위원

- 재정경제부/박철규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 외교통상부/최중현 · 통상정보지원팀장
- 과학기술부/이문기 · 정책총괄과장
- 농림부/정병학 · 법무담당관
- 산업자원부/남기만 · 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통신부/정경원 · 기획예산담당관
- 보건복지부/박현열 · 기획예산담당관
- 환경부/윤승준 · 정책총괄과장
- 노동부/김현수 · 기획예산담당관
- 건설교통부/박상규 · 기획담당관
- 해양수산부/김성진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처/배국환 · 예산제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한철수 · 총괄정책과장
- 금융감독위원회/김진규 · 기획과장
- 중소기업특별위원회/홍용웅 · 총괄조정팀장
-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장낙민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원동업 · 이지은

업무/김석화

인쇄/(주) 유성사

표지 디자인/ 예진

사진/ 김춘식

일러스트/ 오진목

나라경제 · 2001년 11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2권 제11호
 (통권 제132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1310-0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1310-615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 nara@kdi.re.kr

철리안: k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4~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6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지식정보사회를

배 순 훈

前 정보통신부장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 변화는 항상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일단 일어난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변화의 거품이 꺼지면서 변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이전하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회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IMF 사태를 계기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기 위해 정보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확산과 인터넷 사용자 비율 그리고 초고속망 보급에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다. 반면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은 아직도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노동운동은 세계화 추세를 거슬러 가고 있다. 고속통신·신공항 등의 물리적인 투자가 아직도 우리의 경쟁력과 연계되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이 아직도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지만 지



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이미 투자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사회간접 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다. 활용되지 않는 과도한 투자는 오히려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전을 최적화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민간기업에서 e-Transformation을 명확한 목표 없이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단 추진되기 시작하면 추진 결과를 측정하여 새로운 합의하에 목표를 수정하고 추진하는 시행오차를 반복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는 예측할 수 있지만 과거 인류 사회의 발전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자주 빗나갔다. 특히 우리는 초고속통신망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에 관하여는 그 전례가 없어 예측하기 더욱 힘들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사례가 세계 첨단 사례가 되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인류 공동사회의 기본 개념에는 변함이 없다. 자유·평등·박애로 표현했던 19세기 프랑크혁명 정신이나 민주주의·시장경제로 표현되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은 모두가 공동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소득을 증대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보기술은 많은 수단을 제공한다. 통신 기반 시설도 이런 목표로 최적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의 시행 오차적인 복잡성(Complexity)을 감안하면 이런 변화를 유도하고 관리할 항구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기본 역할은 정보 기반사회로의 이전을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라 하여 기존 정부의 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보화가 잠정적인 일이라고 해도 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기존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야 시행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인 변화는 빅뱅으로 일으킨다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인한 큰 대가를 치르고 변화가 일어났으며, 프랑스에서는 혁명 후 여러 번에 걸친 공화정과 왕정의 시행 오차 끝에 지금의 민주정치 체제를 이룩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역사적인 교훈을 잘 활용하여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지연된다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낙오될 위험도 크다. 우리의 입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데는 사회 안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혁신시스템은 사회 구성요소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이, 기업이 신뢰해야 변화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잘살자는 노력인데 비용이 과다하면 변화가 없는 것만 못하다. 지도자·권

력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고,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 이런 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과거 역사 바로잡거나 부정부패 일소처럼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반개혁 세력이 커져 변화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져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고 대기업에서 인원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면 결국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필요한 대가를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분담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사회의 투명성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가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신뢰하는 형태의 항구적인 기구로 구축되어야 한다. 생산의 질서가 지식창조의 질서로 변환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해야 하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이 투명한 시장에서 자유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생산활동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창조에 의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며 경쟁에 의하여 낙오자가 다량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에 의하여 각자 개성에 맞는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다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시행 오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지도자가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 전문가 집단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진도를 측정하여 목표를 수정하고 다시 추진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초고속통신망은 시간·공간의 제약 조건을 감소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기술은 변화를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핵심적인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도시국의 업무는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사철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이곳이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화호 간석지 활용방안 등 정책도 여기서 나왔다. 주택도시국은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막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앞줄 왼쪽부터 최재덕 주택도시국장, 서정석 도시건축심의관
뒷줄 왼쪽부터 정상호 주택관리과장, 이용락 건축과장, 한만희 주택정책과장, 김경식 주거환경과장, 강성식 도시정책과장, 임성안 도시관리과장

주택도시국은 2003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목표로 매년 50~55만호의 주택건설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국은 주택과 도시 관리 정책을 맡고 있는 건교부내 핵심부서다. 신 도시를 건설하고 이사철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일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화호 간 석지 활용방안 등이 주택도시국의 손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렇듯 업무 하나하나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다 보니 자연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신문지상에 하루도 빠짐없이 관련업무가 등장하곤 한다.

업무 하나하나가 국민생활과 직결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업무성취감이 높아 직원들의 자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부내에서 근무하고 싶은 국 1순위에 꼽히고 있다.

주택도시국은 1948년 8월에 사회부 주택국으로 출발한 이래 舊건설부내에서 주택국과 도시국의 양대 산맥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1994년 12월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하면서 주택국과 도시국을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을 보면 주택도시국장을 필두로 도시건축 분야를 보좌하

는 도시건축심의관이 있다. 주택정책과·주택관리과·주거환경과 등 3개 과에서는 주택관련 정책을 다루고, 도시정책과·도시관리과·건축과 등 3개 과는 도시·건축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팀과 주거환경개선팀을 운영하고 있어 총 6개과·2개팀에 98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20조원 정도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고 소관법률도 「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건축법」등 13개에 달한다.

▲ 주택정책과는 장단기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건설 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관리 등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맡고 있다.

▲ 주택관리과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개발, 주택분양 및 보증, 주택의 관리,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등 미시적 측면의 주택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주거환경과는 택지수급계획 수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통해 택지를 발굴·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의 개량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개선, 지구단위 계획제도의 운영 등 계획적으로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정책을 맡고 있다.

▲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건축과는 국내 건축관련 정책의 총본산으로 도시설계제도·건축기준·건축자재·건축사·건축행정의 정보화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담당

국·과장의 면면을 보면 건교부내에서 쟁쟁한 실력파로 알려진 엘리트 간부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서울대학교 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18회로 관직에 입문한 후 주택심의관·건설경제심의관·국토정책국장 등 건교부내 요직을 거친 대표적인 건설통이다. 명쾌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상하간에 신망이 높고 직원들의 술자리에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매력도 함께 지니고 있다. 올해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정석 도시건축심의관(편집자 주 : 취재가 이루어진 이후인 10월 18일자로 건설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음)은 육사와 필리핀 산토

토마스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택관리과장·해외건설과장·건설교통연수부장 등을 거치면서 타고난 성실성과 함께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 부처내 신뢰가 두텁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햄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행시 23회로 공직에 투신하여 건설교통관·장관비서관·토지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부드러운 성품으로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자상한 인간미가 돋보인다. 올해에는 비수기에도 주택가격이 오름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서민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상호 주택관리과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시 23회로 관직에 입문하였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부하직원들과의 융화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성품이다. 입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주)을 정상화시킨 주역이다.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햄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행시 27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젊음에서 우러나오는 패기가 돋

보이며, 행정관리담당관·운수정책과장·국제항공과장 등 건설교통부내 요직을 거쳤다. 관교문제에 대해 당정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논란에 중지부를 찍는 데 기여하였다.

강성식 도시정책과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도시철도과장·주거환경과장·사회간접기획과장 등 건설과 교통부문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조용하면서도 끈기있게 일을 처리하는 성실함으로 수도권 등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는 데 기여하였다.

임성안 도시관리과장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3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소신을 갖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토지정책과장·수도권계획과장 등을 거쳤으며,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을 무리없이 추진한 주역 중의 한 사람이다.

이용락 건축과장은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와 미시간주립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기술고시 14회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駐사우디 건설교통관과 신공항시설과장을 거쳤으며, 건축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건축관련 현안사항과 민원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도시정책도 이제는 미래의 도시생활에 대한 장기비전을 토대로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계획되고 개발·관리되어야 한다.

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무리한 재건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간다

그동안 주택도시 정책은 내수 경기 진작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이사철마다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계획적인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도시생활의 쾌적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직접 다루는 조직이니 만큼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택도시국의 손에 달려 있다.

우선 김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공급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수도권외의 경우 아직 주택보급률이 84%로 낮아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집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택도시국에서는 2003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매년 50~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이 전월세 세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동안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또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국에서는 재정(3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양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며, 고층아파트 일변도 개발에서 벗어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정책도 이제는 과거의 개

발일변도에서 벗어나 미래의 도시생활에 대한 장기비전을 토대로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단기적인 관점의 도시정책은 필히 교통비 등 도시 생활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또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구역내외의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국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주택도시 정책을 수립하여 주길 기대해 본다.

글·유대형/한국경제신문 기자



세일즈 외교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한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담: **김정수**/중앙일보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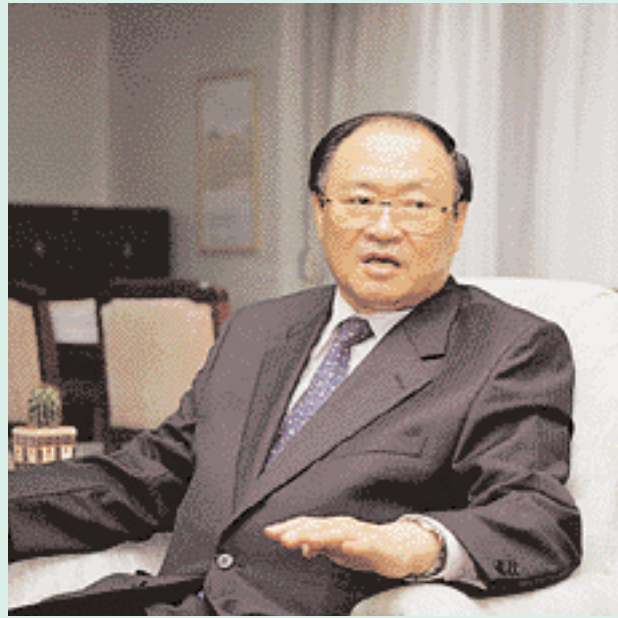
· 때: 2001년 10월 4일 · 곳: 통상교섭본부장 집무실



“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130여 재외공관을 독려해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미간 자동차분야 교역 불균형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지만, 미국이 부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이 둔화 내지 침체되던 상황하에서 지난 9월 미국에 대한 테러 참사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수출과 외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경제·통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에서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130여 재외공관을 독려해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부의 ‘수출/투

자유치지원반’과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기업지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유망시장 및 품목정보의 수집·전파, 해외 프로젝트 수주, 투자유치, 바이어 알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설명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한국경제 개혁 성과와 개선된 외국인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협의단 파견 및 「국별 통상환경보고서」 발간,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로서 재외공관과 본부 홈페이지의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반덤핑 제소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미국·EU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중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입니다. 더욱이 미국 테러 참사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올 9월말 현재 112건이며,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기업들이



외국의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통상교섭본부 출범 직후 '민·관합동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하여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하였고, 우리 상품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를 해결해 나가면서,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규제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정부가 수입규제절차를 개시할 경우, 현지 실사 등 필요한 단계에 제3자로 참가해서 우리 업계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남

안도 아울러 강화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교역확대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려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하이닉스 반도체·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통상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 현재 한·미간에는 자동차 교역불균형 등 일부 현안이 있으나, 대체로 원만한 경제·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높은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몇 가지 현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

용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말 출범하게 되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 반덤핑 발동 요건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방

부진 및 우리 자동차의 대미수출 증가에 따라 양국간 자동차 분야 교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의 경우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57만대인 데 비해 수입은 2,50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동차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지나친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고속도로 순찰차량을 외국산 자동차로 구매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측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동 사항은 채권단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정부는 일체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WTO 가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어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우리의 거대한 시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시장 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중 양국은 오늘날 상호 3대교역국으로서 지난해 교역액은 사상 최초로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통상 협력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흑자시장(홍콩 포함시에는 151억달러)으로서 2001년 상반기에는 제2위의 수출시장이자 제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경제의 활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WTO 규범과 시장원리에 따라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보완관계에 기초한 산업협력 관계

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 등으로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중국 진출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중국시장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뉴라운드 의제를 둘러싼 회원국간 의견이 많이 접근되어 오는 11월초 도하에서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을 추진중인 사항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 경제는 2000년 기준 GDP의 73%가 대외무역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대외지향적



대담자 김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1950년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키일세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중앙일보 전문위원으로 일해 왔으며,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통해 WTO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증진되고 WTO 무역규범이 개선되면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시장이 확대되고 부당한 수입 규제조치가 제거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이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뉴라운드 의제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반덤핑'으로 WTO 출범후 반덤핑 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 개도국도 반덤핑 협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유일하게 반덤핑문제의 의제 포함에 반대해 온 미국도 의회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나 최근에는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노력과 함께 양자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칠레와의 FTA 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한·일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온 FTA 체결에 대한 공동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려 주시지요.

▲ 정부는 칠레를 우리나라의

부는 우리에게 민감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예외조치를 확보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며 한·칠레 FTA의 조기 타결을 계속 추진중입니다.

한·일 FTA 체결 문제는, 19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 회담시 FTA 추진에 관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8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시행했고,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경제계인사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하여 올해 9월 7일 ~ 8일 서울에서 양국간 포럼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양국간 FTA 추진은 앞으로 비즈니스 포럼의 보고서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1999년 12월부터 공식협상 개시 이후 4회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관세철폐의 예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와 경제계·학계·언론계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자유무역협정과는 별도로 미국 및 일본과의 투자협정(BIT) 협상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의견이 접근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슈로 인해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한·일 투자협정은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간 투자협정 추진에 합의한 이래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협정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 등 잔존 쟁점 대부분에 대해서는 양국간 의견이 수렴된 상황이며 최대쟁점인 노동조항 처리문제에 대한 타결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한·미 투자협정은 1998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한 이래 실무협상 3회, 비공식 실무협의 2회 등을 가졌고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스크린쿼터 제도, 저작권 소급보호 등 남은 쟁점은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 기고

2002년 예산, 이렇게 본다

시 장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공공 부문의 주체인 정부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은 예산을 통하여 반영된다. 예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심으로 한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지출이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표이다.

무리한 재정팽창은 장기적 안정 성장에 도움 안돼

예산의 적정규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가 지향해야 하는 중심 철학의 정립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은 바로 이를 반영하는 기본척도로서 매년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로 간주하는 사실이 예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입증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wlee@korea.ac.kr)

하고 있다.

200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예산이란 점에서 임기 동안의 경제정책과 나라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하는 임무 또한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증대되어 온 6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다음 정부에 재정부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재정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내용

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와 재정용자 특별회계를 합쳐 전체 규모는 112조5,800억원으로서 그 증가율을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 추정 기준으로는 6.9% 증가한 액수이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12.3% 증가한 액수이다. 정부 예산이 경제성장률보다 무려 4%p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어 우리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예산을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예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부문은 사회간접자본·주택·농어촌 지원·통일·외교·국방뿐이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부문의 지출은 민간자본 유치까지 포함하면 13.3% 늘어나게 돼 있다. 농어촌 부문의 예산증가율이 낮은 것은 2001년에 부채경감과 어선 감척 등을 위한 일시적 예산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증가율

이 특히 높은 부문으로는 사회복지(18.6%), 과학기술(15.8%),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14.2%), 교육(11.5%), 인건비(9.9%) 등이다.

이와 같은 팽창예산이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건전재정의 악화, 구조조정의 지연 등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에는 그 역기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내년도 경기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경기진단을 기초로 할 때 단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팽창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냉철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재정형편을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내년에 구조조정 채권 및 국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0조원에 이른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팽창예산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건전재정의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역기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팽창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냉철히 재고해야 한다.

1998년에는 1조4,273억원에 그쳤으나 1999년 5조2,895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00년 7조4,542억원, 2001년 8조5,763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매년 공적자금 원금 만기 도래액은 2002년 5조6,895억원,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도 고질적인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집착해 무리한 재정팽창을 도모한다면 재정의 안전성이 훼손되고 경제의 장기적 안정적 성장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선심·전시용 사업 자제를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사실도 정부 예산 운용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권당이나 특정 정파에 정치적 이익을 주기 위해 구조조정

을 미루거나 선심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전시용 사업을 벌이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예전에도 흔히 그러해 온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도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경제성 없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방만하게 반영하고 있다.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축동기와 근로 의욕을 악화시키는 소비성 복지예산의 과도한 확대, 급조 성격이 짙은 대규모 교실 신축 및 교원 증원을 위한 교육예산 증액, 현실을 무시한 공무원 봉급 인상폭 등은 선거용 선심예산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 기준으로 연간 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연간 18.6%씩 확대된다면 설령 사회복지체계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훌륭한 명분이 있더라도 팽창예산, 선심예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방만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체제의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기초생활보장제나 의료보험제도의 전문요원도 군 보충역 인력으로 부분적 대체하는 입법화가 연구 검토되었으면 한다.

교육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제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벼락치기 식으로 교사를 충원하고 교실을 신축하는 예산은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조차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에서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총인건비를 9.9%나 늘리고 일인당 평균 급여를 6.7%나 올리면서 예비비까지 넣은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2004년까지 대기업 급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하지만 재정이 쪼들리는 마당에 당초의 계획은 수정되었어야 마땅하다. 경제가 어려워져 민간 쪽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질 때 공무원 급여만 오르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당국에서는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기능을 총동원해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으로 재정책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화란 또다른 중차대한 과제를 고려한다면 경기대책은 재정지출 규모보다는 엄격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과 교육 부문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적 경기부양과 함께 재정운영시스템 개혁을

정부일각과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경기부양정책이 미국의 테러 참사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경기부양정책에 관한 한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기부양책은 반짝경기 효과만 있을 뿐 구조조정을 지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와 같은 부작용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참사가 있기 전에도 세계적인 IT산업의 불황으로 미국의 경기침체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미·일 경제의 침체 등 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부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도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도의 제한적 경기부양을 그 중심철학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의 예정된 복원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데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항구적 구조개혁 노력이 함께 하는 공공부문 개혁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편성의 '톱-다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의 도입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섯 항목의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당국은 분야별·기능별 총액을 정하는 한편 신규사업 및 대규모 지출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세부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검증절차(market test)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개별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

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성과에 초점을 둔 감사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투자우선순위 조정, 성과관리, 경영혁신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부금이 증액된 만큼 지방정부의 예산 규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가채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도 국가전체의 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금재정 개혁도 시급

기금은 그 수 및 규모가 방대하여 '제2의 예산'으로서 재정은 물론 실물경제, 금융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9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중 40% 수준이 기금적자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기금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재정건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

예산편성의 '뚝다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당국은 분야별·기능별 총액을 정하는 한편 신규·대규모 지출에 심사 및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개별부서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이다.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됨으로써 전체재정과 연계운용이 미흡하여 예산과 기금, 기금과 기금간에 재정지원체계가 중복되어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자금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보다는 복리후생사업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주변사업까지 수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기금운용에 대한 점검·평가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설치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신설에 대한 통제장치가 취약하여 각부처의 편의에 따라 기금신설이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누적된 문제점으로 인해 기금적자가 확

대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의 차별성, 유사 중복성, 목적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과감히 정비해야 하며

존치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핵심역량 위주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기금이 적자재정관리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부담의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금부담금은 징수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에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기금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례적으로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기금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도 요망되고 있다.

넷째, 기금회계도 일반회계처럼 국회의 예산심의, 결산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복식부기 등 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명성과 부정방지 효과의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해야

국채이자·방위비·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요소가 예산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의 인상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재정·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지출수요 및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예상재원소요 및 S.O.C, 정보화 등 미래투자수요를 고려할 때 건전재정 복원을 위한 세율증가율이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자를 체험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적자규모가 GDP의 4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정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며 부문별 재정지출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재정적자 감축 법안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개혁도 모든 국민들을 골고루 만족시킬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적 일 수는 없다. 일부 이해집단의 불만이나 저항을 고려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제도개혁의 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개혁이 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요망된다.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을 정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

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하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화의 시행과 더불어 거시경제가 동반적으로 상승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는 재정·통화·환율정책 조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꽃피우고 있는 선진 여러 나라들은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치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개혁을 부단히 단행해 오고 있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초연할 수 있고 개혁의 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만이 개혁의 값진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향유할 수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자각할 시점이다. ■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다.

재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고려하지 말고 각종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에는 수지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통합재정에는 수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입·세출 예산에는 국채발행 등에 의한 현금유입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상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공공기금만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기금은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도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각종 기타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 규모는 통합재정의 총지출 규모나 총수입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재정 규모를 공표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

2002년 예산, 이렇게 본다

112

조 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우선 예산규모의 증가율을 놓고 긴축예산이나 확장예산이나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구성 항목에 근거한 특징을 따질 수도 있다. 나아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계산이 근거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보다 장기적 차원의 예산정책의 일관성 등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예산 기준 및 본예산 대비 증가율 함께 고려해야

우선, 일반여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산의 증가율부터 살펴보자.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증가분을 합한 총예산은 올해 추경분을 포함한 최종예산보다는 6.9% 증가했고, 본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3% 늘어난 규모이다. 예산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가정한 경상성장률 8%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증가율을 택하느냐에 따라 예산팽창에 대한 명목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6.9%의 증가율이 신빙성 있는 예측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진행중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에 정부 여당이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최종예산 기준 증가율과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예산규모의 팽창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안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적인 수치 몇 개를 놓고 예산의 팽창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생각만큼 큰 의미가 없다. 우선 앞서 언급한 추경편성 문제 등 상황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상성장률이 8%라는 가정은 5%의 실질성장률과 3%의 물가상승률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치 자체의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상태이다. 나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이러한 총량 규모의 변화와 비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변수는 예산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예산 구성항목의 추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경우라면 예산의 구

성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가 핵심과제라면 복지성 지출 항목에 초점을 둘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고려하는 예산이라면 구조적 성격의 지출항목은 증가가 억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서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경기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 항목의 증가율은 6%, 수출과 중소 벤처기업 분야의 증가율은 8.7% 정도에 머무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덜한 분야의 증가율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예산 증가율이 15.8%에 달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8.6%나 증가했다. 기타 다른 항목들을 고려할 때도 이번

이번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재정운영의 가장 큰 현안은 만기가 도래되는 구조조정 공채 문제인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타 경직적인 예산항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이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내년의 실질성장률이 매우 낮아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효과를 진작시킬 수도 있다. 요컨대, 현 예산안은 어느 정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지는 있지만 전체 예산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경기부양에 치중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목표인 재정건전화의 추구는 예산 항목의 성격에 따라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일시적인 수치 변화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우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우 발생하는 단기적인 적자는

정책의 실효성만 담보된다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다. 반면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완만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이고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이 커진다면 구조적인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경기활성화·재정건전화와 거리 멀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은 명목상의 구호와는 달리 구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자·인건비·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53조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7%에 달한다는 점은 신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지출처럼 한번 증가되면 다시 감소하기 힘든 항목까지 합치면 구조적 지출항목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보존용 국채발행 규모를 3천억원 정도 줄인 것을 가지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공적자금의 재정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이

다. 구조조정에 사용된 재정자금은 크게 정부보증채의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과 기타 공공자금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채발행을 관장하는데 그 이자는 현재 예산에 직접 반영되고, 원금의 경우는 최종 손실분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공적자금 이자가 7조7,279억원이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가 1조9,986원으로서 이자지출만 9조7,265원이 계상돼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8.6%로서 국제기준으로도 결코 작은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자 부담이 최근 들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04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자금이 정부보증채의 발행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 총액에 대한 이자부담만도 만만치 않은데 내년부터는 원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사정을 보면 사용된 자금의 회수율이 매우 낮는데 만일 예정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예산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손실분이 매우 클 것이다. 사실 초기에 조성된 64조원의 공채자금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사용한 부분의 상당분은 조기에 회수되었다.

이 회수자금을 바로 공채상환에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회수된 자금의 대부분이 재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향후 몇 년간 재정운영의 가장 큰 현안은 만기가 도래되는 구조조정공채를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상환하느냐 아니면 차환 발행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직적 성격의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는 침체국면의 경기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당장의 손실부담은 없겠지만 이자부담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부담이 있다. 차환 발행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공과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 타협에 의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이자부담은 당분간 줄기 힘든 경직적 예산항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예산이

라면 기타 경직적인 예산항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사회보장지출, 문화 및 과학기술 항목과 같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조차 그 증가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분야의 지출 증가가 공무원의 사기, 사회구성원의 복지,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이란 한해의 필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조적인 성격의 항목일수록 안정적으로 예산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인 시계에서의 예산제약을 고려해 증가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의 여지가 줄어든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예산안의 구성은 재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이번 예산안은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화라는 명목상의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예산 심의과정, 보다 투명해야

여년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예산안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치

적인 동기를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예산안 자체만을 놓고 어느 것이 선심성 예산인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경우 총량규모나 기능적인 세분류만 가지고 어디까지가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복지지출의 경우도 복지제도를 확충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무조건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치 동기의 개입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심의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떼떼한 항목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추인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항목은 저절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심성 성격이 강한 예산 항목일수록 여야의 구분 없이 밀실에서 타협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밖으로 드러난 명목상의 액수나 비중보다 경제적 실효성을 제대로 고려한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예산의 심의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내역과 추이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제표준에도 부합되고 경제논리에도 맞는 통합재정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 계정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의 평가는 중국적으로 예산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총량규모의 증가율이나 1인당 세부담과 같은 수치는 일반여론의 주의를 끌기에는 편리하지만 실질적인 예산평가의 기준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의 배분 구성이 어떤지, 주어진 항목의 성격이 얼마나 신축적인지, 구조적인 항목의 경우 장기적 예산제약의 관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증가율이 결정됐는지, 예산의 심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 등이 예산 평가의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부 재정의 범주이다. 정부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라면 공표되는 예산에

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예산이나 다름이 없는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내역과 추이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표준에도 부합되고 경제논리에도 맞는 통합재정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

계정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 규모로 하고, 예산 심의는 기준에 사용하는 협의의 예산기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의 계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에 대한 가정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산안에서 상정된 5%에 크게 밀도는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긴축이나 팽창이나 하는 총량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재정의 기능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가정의 경우에는 정부의 자체 의견보다는 권위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행은 자의성의 개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켜 줄 것이다. ■

경제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확대

112

조5,800억원 규모의 2002년도 예산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은 올해 3월말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부처가 5월말 예산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여 예산자문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재정규모는 112조5,8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당국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백국환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kbae001@mpb.go.kr)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4/4분기부터 침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이 경제에 있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도 조기에 회복해 나가는 일이었다.

예산당국자들을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은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對美 테러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였고, 이에 따

라 한정된 재원을 경기진작과 관련된 투자에 추가로 배분해야 하는 등 재원배분에 추가적인 제약요인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재정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빚을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정부는 경제회복과 함께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지난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예산상 11조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재정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청량제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는 2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對美 테러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정부는 향후 사태의 진전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비상경제대응계획'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 불확실 요인에 대처하고 내수회복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9월에 확정된 5조1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하고,

112조 5,800억원 규모의 200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SOC투자 확대로 건설경기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여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며, R&D·정보화 및 인력양성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자비용액 등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7조2,999조원(6.9%) 증가한 112조5,800억원이다.

재정규모를 세입면에서 보면, 국세수입·세외수입·국채발행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세수입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올해 예산보다 8조5천억원 증가한 94조3천억원이 거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과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예상분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한 2조1천억원을 책정하였다.

세출면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성화, 복지체제의 내실화와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역점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면 내수진작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SOC 투자예산은 올해 주요 투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 요인이 있

〈표 1〉2002년도 재정규모

(단위: 조원, %)

	2001년 예산(A)	200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일반회계	99.2	106.5	7.3	7.4
국세수입	85.8	94.3	8.5	10.0
세외수입	11.0*	10.1	-0.9	-8.3
국채발행수입	2.4	2.1	-0.3	-13.6
채특회계(순세입)	6.1	6.1	-	-
재정규모	105.3	112.6	7.3	6.9

주: * 본예산 5조9천억원, 추경에서 전년도 세계잉여금 4조1천억원과 한은잉여금 1조원 추가

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수준보다 증액하였다. 내년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신공항철도, 부산·목포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자를 포함한 SOC 총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 건설경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는 2004년 4월에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착수, 부산신항·광양항 개발을 통해 동북아 허브공항 및 항만 육성을 적

극 지원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10개 다목적댐을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력의 해외 전진배치와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해외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였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과 벤처펀드 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 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복지체제의 내실화

복지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표 2〉 부문별 재원배분

(단위: 억원, %)

	2001년 예산(A)	2002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SOC·주택 (민자 포함시)	148,716 (154,685)	157,689 (175,197)	8,973 (20,512)	6.0 (13.3)
수출·중소·벤처기업	32,679	35,506	2,827	8.7
농어촌 지원	98,943	99,182	239	0.3*
정보화	14,692	16,086	1,394	9.5
과학기술(R&D)	42,689	49,429	6,740	15.8
문화·관광·체육	12,431	13,452	1,021	8.2
교육 (본예산 기준)	215,828 (200,188)	223,250	7,422 (23,062)	3.4 (11.5)
사회복지 (본예산 기준)	93,713 (81,459)	96,613	2,900 (15,154)	3.1 (18.6)
환경보전	26,392	28,594	2,202	8.3
통일·외교	7,797	8,251	454	5.8
국방비	153,884	163,640	9,756	6.3
인건비	189,432	208,237	18,805	9.9
공적자금·국채이자	85,763	97,930	12,167	14.2

주: * 지난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 따른 일시적 증가분, 어선감척 등 자연감액요인 7천억원 감안시 실질적으로 7.9% 증가

의 정부」 국정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하고 있다. 과거 성장우선주의에 입각한 국가발전 패러다임하에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성장 전략이 큰 반발 없이 먹혀 들 수 있었으나, 21

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이고 인권경시적인 발전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늘진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장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혜적으로 서민층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 하는 ‘생산적 복지’에 기초해서 복지와 성장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가 전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전국민 국민연금 보장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괄목할 만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SOC투자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활근로인원과 지원기관을 확충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각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노인과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을 인상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함과 더불어 산전후 휴가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환경 개선과 국민건강·안전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도 지속된다. 중소도시·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확대하고 월드컵 개

최도시에 매연이 전혀 없는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였다. 낙석·산사태 방지시설, 항공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월드컵 등 중요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테러진압

용 헬기 등 테러방지 관련장비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의 확대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세계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R&D나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가가치는 대단히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미래 대비 투자는 경제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한편 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들 분야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였다.

정보화 부문에서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윈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전자 정부(e-Government)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도서관 정보화,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지도 전산화를 완료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 확산을 지원하였다.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서 기초연구분야·차세대 성장기반기술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R&D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강화를 통하여 중복투자방지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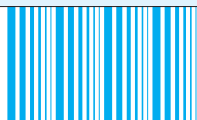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도 확대하였다. 지난 7월 발

표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중학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확대하였다.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 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음반 등 문화산업을 차세대 견인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였고,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對美 테러사태와 보복전쟁으로 인한 세계경

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던 저력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도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빠른 시간내에 극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용어해설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 부담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 국가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말

까지만 해도 50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0년말에는 100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19.5%로 높아졌다. 또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말 65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14.4%였으나 2000년말 1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1%로 급증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SOC 투자 확충으로 경제활성화 뒷받침

각 중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가 세계 주요 48개국의 교통 부문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GNP 규모가 9위, 교역규모는 12위인 반면, 교통 부문 경쟁력은 30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혼잡비용)은 GDP의 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SOC예산은 올해 대비 6.0% 증가

최근 미국경제의 침체 및 테러사건의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서종대
건설교통부 예산담당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수요의 침체와 관계 없이 재원이 조성되는 대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가장 유효한 수단인 SOC 건설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SOC예산으로 2001년 예산(14조8천억원) 대비 6.0%가 증가한 15조7,689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6조3천억원이 많은 21조 1천억원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다

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내년에 복지·교육 등 추가소요만 12조원이 늘어나는 데 비해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속도로·항만 등 민간 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분(2001년 5,969억원→2002년 1조7,508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3% 이상 증가한 17조5천억원이 될 전망으로 어려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댐·공항 등 SOC의 주요 부분과 R&D·광역상수도 등을 포함한 건설교통부의 2002년 예산안은 15조826억원으로 2001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2002년 건교부 예산(안)은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

었다.

먼저 SOC부분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던 철도·항만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공항에 대한 투자를 축소·조정하였다.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SOC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3,100억원→1조 1,166억원).

또한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지하철·고속도로·광역도로 등)은 지자체 등의 과도한 부채를 감안, 각 기관의 재원분담가능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

2002년 SOC 예산으로 2001년 대비 6.0% 증가한 15조7,689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고속도로·항만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3% 이상 증가한 17조5천억원이 될 전망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으로 조정하였다(지하철 건설 6,660억원→5,467억원, 고속도로 2조 239억원→1조 3,510억원, 광역도로 1,118억원→485억원).

토특회계는 만성적인 세입부족으로 매년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타 회계로 전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한층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토특회계→일반회계 : 전주권2단계 123억원, 백제권 개발 243억원, 토지종합전산망 115억원, 토특→재특 : 중소기업임대단지 50억원).

끝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지속 추진 등 주요 계속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소요분을 지원하였다.

**도로 부문에
8조1,376억원 반영**

1990년대 들어와 SOC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나, 차량 증가

〈표 1〉 건설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SOC 예산안	148,716	157,689	8,973	6.0
건설교통부 예산안	147,334	150,826	3,492	2.4
도로	80,839	81,376	537	0.7
철도	28,208	31,310	3,102	11.0
공항	3,426	2,912	-514	-15.0
수자원	16,894	14,709	-2,185	-12.9
광역교통	2,544	2,126	-418	-16.4
지역개발 주택	7,389	9,736	2,347	31.8
기타	8,034	8,657	623	7.7

주: 건교부 예산에서 R&D, 인건비 등 非SOC예산을 제외하고 철도(철도청), 항만(해양수산부) 건설을 포함하면 SOC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표 2〉 도로 부문 예산(안)

(단위: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국도 확·포장	46,738	47,660	922	2.0
일반국도건설	17,343	18,400	1,057	6.1
기간국도, 산업지원국도	20,631	19,600	-1,031	-5.0
국가지원지방도	3,900	4,500	600	15.4
국도대체우회도로	4,600	4,900	300	6.5
교통량조사 등	264	260	-4	-1.5
고속도로 건설지원	20,239	13,510	-6,729	-33.2
도로 운영	7,476	7,877	401	5.4
기타(민자사업 유치 등)	6,386	12,329	5,943	93.0
계	80,839	81,376	537	0.7

〈표 3〉 고속철도 및 지하철 부문 예산(안)

(단위: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고속철도	8,852	7,500	-1,352	-15.3
지하철	9,509	8,174	-1,335	-14.0
서울 9호선 등	539	892	353	65.5
부산 2, 3호선	2,109	1,552	-557	-26.4
대구 1, 2호선	2,065	1,506	-559	-27.1
광주 1호선	1,129	697	-432	-38.3
대전 1호선	818	820	2	0.2
기타	2,849	2,707	-142	-5.0
계	18,361	15,674	-2,687	-14.6

〈표 4〉 수자원 부문 예산(안)

(단위: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다목적댐 건설	2,233	2,253	20	0.9
(광역)상수도 건설	4,032	2,896	-1,136	-28.2
치수사업	10,629	9,561	-1,068	-10.0
수계치수사업	4,243	4,623	380	8.9
일반하천개수	3,124	1,633	-1,491	-47.7
수해상습지 개선	1,800	2,300	500	27.7
기 타	1,462	1,005	-457	31.2
계	16,894	14,710	-2,183	-12.9

율(10.8%)에 비해 도로증가율은 연평균 5.2%에 불과하여 혼잡구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격자형 국가 간선망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조3,510억원

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주-충주, 천안-논산 등 5개 구간은 2002년중 완공하는 한편, 고창-장성, 평택-음성 등 9개 구간 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27개 구간 신설 확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2001년과 유사한 수준인 4조7,66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교통여건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도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낙석 방지, 병목지점 개선, 표지판 개량

2002년 건설교통부 예산(안)은, 철도·항만에 대한 자원배분의 확대, 도로·공항 투자의 축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 정부·지자체·도로공사 등이 분담하는 사업의 규모 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등에 7,8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 412km)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7,05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의 2004년 공사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3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방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등 5개 도시 7개 노선의 지하철 건설(서울 9호선, 부산 2·3호선, 대구 1·2호선, 광주·대전 1호선 건설)과 기존선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8,17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탑승구·여객터미널·활주로 등 주요 시설이 2005~08년중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2단계 확장공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하였다. 추후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여객처리능력은 2,7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270만t에서 450만t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의 확장사업에 1,836억원을 투입하고, FAA(미국 연방항공청)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항로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운영에 2001년 대비 97% 증가된 933억원을 투입

〈표 5〉 지역개발 및 주택 예산(안)

(단위: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지역개발(개축지구 등)	1,628	1,641	13	0.7
주택 건설	5,761	8,095	2,334	40.5
근로자 주택	700	-	-700	-100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지원	2,100	3,000	900	42.8
국민임대주택	2,364	4,531	2,167	91.6
기타	597	564	33	5.5
계	7,389	9,736	2,347	31.8

할 계획이다.

치수사업 및 다목적댐 부문에 1조4,710억원 계상

2002년 치수사업에 9,56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 투자를 통해 2007년까지 국가 및 지방 하천 등의 개수사업을 완료하고, 과학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 '홍수예·경보시설'을 안양천 등 7개 주요 도시 하천에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의거 수계별로 2,253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댐·탐진댐 등 9개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2%에 불과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2,896억 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1단계를 복선화하고, 전주권 2차 등 9개 사업을 2005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1,641억 원을 편성하였다. 2002년에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완공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각각 123억원, 243억 원을 투입하고, 개발촉진지구 1~4차 지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175억 원을 편성하였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민·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특히 전세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산으로 92%가 증대된 4,5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60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대비 50% 증대된 3천억 원을 편성하였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1,295억 원을 편성하였다. 내륙화물기지·유통단지 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343억 원을 반영하여, 대구서부·중부대전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등과 대전·천안·울산 등에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유 특소세 인상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7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철도청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

진하는 철도와 항만 건설 예산의 경우 각각 1조7167억원, 1조2,401억원이 편성되었다. 철도청에서는 수원-천안간 복선(1,500억원), 전라선 개량(1,300억원), 호남선 전철화(2,850억원) 등 간선철도 건설사업과 부산-울산(150억원), 신분당선(15억원) 등 광역전철망사업, 철도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신항·광양항 등 7개 신항만사업과 부산항·인천항·군산항 등 지역거점 항만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OC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각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각종 집행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SOC 예산 등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20

02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5.5% 증가한 4조 5,61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신규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14.5% 증가한 1조 5,699억원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의 지속적인 구축을 위해 올해 대비 5.8% 증가한 2조 6,67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의 일부사업이 중기청 및 환경부 사업과 통합되는 등의 요인으로



오일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oh28@mocie.go.kr)

올해 대비 24.6% 감소한 3,23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여기에서는 내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의 특징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확대

경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내년도 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예산은 올해 4,360억원보다 11.3% 증가한 4,85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수출보험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2천억원)하고 일류상품의 국내외 로드쇼 개최 지원 및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설, 무역정보 전산화 등 무역기반조성사업(302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1,022억원)을 통해 우리 상품의 마케팅 활동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불·평동 등 외국인 전용단지 추가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증액(548억원)하고 분양가 차액보조 및 고용훈련 지원 등 외국인투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227억원)하는 한편, 특히 내년에는 투자가 유망한 개별기업 대상의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유치활동비를 대폭 증액(3억원 → 25억원)하였다.

또한 중국·중남미 등 주요 무

역후자 대상국과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를 신규로 지원 (3억 원) 하고,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경쟁력 조사사업을 신설(3억 원) 한 것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 R&D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증진과 더불어 향후 우리 경제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등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 8,781억 원보다 14.7% 증가한 1조74억 원을 반영하였다.

산업혁신기술개발을 확대

2002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4조5,61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4.5% 증가한 1조5,699억 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51억 원→2,476억 원) 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인력양성, 표준화, 디자인 등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도 강화(706억 원→970억 원) 하였으며,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 기술연구집단지화사업(868억 원→880억 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부품·소재의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이 확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부품·소재를 수출 주력산업화합

으로써 항구적인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767억 원→1,291억 원)과 신소재 향상이기반 구축사업(300억 원→360억 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자

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B2B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지원 등 기반구축사업을 확충(173억 원→295억 원)하고, 전자상거래 응용 및 차세대기술개발(50억 원→64억 원)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청정생산기술, 국제기술협력, 항공우주 및 민군겸용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재 및 첨단시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기술자금 융자도 2천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산업 합리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산업 육성과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통해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지원도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2,330억 원보다 15.9% 증가한 2,701억

〈표 1〉 2002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

	2001 예산 (A)	2002 예산(안) (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3,716	15,699	1,983	14.5
채특회계	4,290	3,236	-1,054	-24.6
예특회계	25,220	26,675	1,455	5.8
총 계	43,226	45,610	2,384	5.5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대구섬유·부산신발·광주
光·경남기계 등 이미 추진중인
4대 지역산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지원(1,480억원)되
며 특히 내년부터는 충청·강
원·경북·전남북·제주 등 신
규지역에 대해서도 IT·BT 등

미래성장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착수(600
억원)할 예정인바, 구체적인 지
원내역은 현재 진행중인 '지역

〈표 2〉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B-A)	
				증감률
수출보험기금 출연	200,000	200,000	0	0
무역기반조성사업	36,334	30,199	-6,135	-16.9
외국인투자유치	60,000	80,000	20,000	33.3
군산자유무역지역개발	32,700	57,381	24,681	75.5
KOTRA 지원 등	106,924	117,813	10,889	10.2
계	435,958	485,393	49,435	11.3

〈표 3〉 산업기술 R&D 확대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B-A)	
				증감률
산업기술개발(출연)	436,500	509,717	73,217	16.8
산업혁신기술개발(총액)	205,100	247,587	42,487	20.7
부품소재기술개발	76,700	129,080	52,380	68.3
지역특화기술개발	40,200	48,200	8,000	19.9
항공우주기술개발	32,000	26,000	-6,000	-18.8
민군겸용기술개발	10,000	9,200	-800	-8.0
국제협력기술개발	6,000	8,300	2,300	38.3
청정생산기술	34,500	35,000	500	1.4
전자상거래기술개발	5,000	6,350	1,350	27.0
선도기술개발(완료)	27,000	0	-27,000	0
산업기술기반조성(출연)	241,600	297,712	56,112	23.2
산업기술기반구축(총액)	70,630	97,000	26,370	37.3
부품소재기반구축	30,000	36,000	6,000	20.0
지역진흥기반구축	31,800	42,500	10,700	33.6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3,570	3,213	-357	-10.0
기술연구집단화	86,800	88,000	1,200	1.4
전자상거래기반구축	17,300	29,499	12,199	70.5
산업기술대학	1,500	1,500	0	0
산업기술자금(용자)	200,000	200,000	0	0
계	878,100	1,007,429	129,329	14.7

산업 타당성조사용역(2001년 5~12월)'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산업 합리화를 위해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160억원)과 선진유통기법 도입 및 중소상

인 교육·연수 등 구조개선 지원사업(55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400억원)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비(6억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선진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의 지속적인 구축을 위해 올해 대비 5.8% 증가한 2조6,67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올해 대비 24.6% 감소한 3,236억원이 반영되었다.

원)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진형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7,835억 원보다 276억 원 증액된 8,111억 원을 계상하였다.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비축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비축유 구입을 확대(1,514억 원 → 1,788억 원)하고, 동해-1 가스전 등 국내외 석유·가스개발 지

〈표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합리화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1 예산(A)	2002 예산(안)(B)	증 감(B-A)	
				증감률
지역산업 진흥	180,000	208,000	28,000	15.6
4대 지역산업	180,000*	148,000	-32,000	-17.8
· 대구 섬유산업	60,500	17,000	-43,500	-71.9
· 부산 신발산업	30,500	21,600	-8,900	-29.2
· 광주 광 산업	52,400	67,000	14,600	27.9
· 경남 기계산업	33,600	42,400	8,800	26.2
신규지역특화산업	0	60,000	60,000	순증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0	21,497	21,497	순증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	0	16,000	16,000	순증
구조개선 지원사업	0	5,497	5,497	순증
농공단지 진흥	53,000	40,600	-12,400	-23.4
시설·운전자금 융자(재특)	53,000	40,000	-13,000	-24.5
교육훈련비 보조	0	600	600	순증
계	233,000	270,097	37,097	15.9

주: * 지역산업진흥 타당성조사 용역비 30억원 포함

원을 강화(1,461억원→1,820억원)하는 동시에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관망 건설 등 천연가스 공급기반 구축사업(2,104억원)도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등 일반광 자원개발도 계속 지원(1,124억원)할 방침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6,548억원을 내년에는 7,604억원으로 확대 반영하였다.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집단에너지 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 절약사업(3,199억원) 및 대체에너지 보급(466억원)과 집단에너지 공급(1,988억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특히 내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소비자 요금안정을 위해 1,37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바, 재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석탄산업 합리화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에도 지난해 4,641억원에서 올해는 233억원이 늘어난 4,8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폐광·감산 등 국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탄가지원 대상 물량이 감소(343만t→320만t)함에 따라 탄가안정대책비 지원은 축소(2,314억원→2,158억원)하는 반면, 폐광·감산 확대에 따른 폐광대책비(568억원→1,033억원)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1,136억원→1,259억원)은 확대하였다.■

〈표 5〉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B-A)	
				증감률
석유비축사업	196,073	218,661	22,588	11.5
석유·가스개발	146,092	182,003	35,911	24.6
LNG공급기반구축	224,000	210,400	-13,600	-6.1
일반광자원개발	117,208	112,421	-4,787	-4.1
원유도입선다변화 등	100,152	87,659	-12,493	-12.5
계	783,525	811,144	27,619	3.5

〈표 6〉 에너지 이용 합리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B-A)	
				증감률
에너지절약사업	318,932	319,918	986	0.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7,712	336,422	108,710	47.7
에너지자원기술개발	62,045	56,327	-5,718	-9.2
대체에너지보급 등	46,127	47,742	1,615	3.5
계	654,816	760,409	105,593	16.1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

전

자정부 구현은 21세기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과제로서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수단이자 국민과 기업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그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 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전자정부 기틀 마련

이를 위해 정부는 1999년 3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인 '사이버 코리아 21'을 수립하고, 이 청사진 아래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 3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1년 5월



남궁민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전략보고회'에서 2002년까지 중점 추진할 전자정부사업 11개를 확정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1개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 및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으로는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 구축사업,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으로는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사업,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2002년 전자정부 중점추진과제 예산규모는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G4C) 사업 127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480억원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G2B) 275억원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12억원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132억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39억원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62억원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14억원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사업 28억원 ▲정부전산센터 통합사업 30억원 등으로 10개 사업에 약 2천억원이 반영되었다.

4대 사회보험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은 이번 예산작업에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사업규모는 2,035~2,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 11개 중점추진과제는 정부가 내년까지 우선 완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력사업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기관별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기관방문 횟수와 구비서류의 과다, 복잡한

정부는 내년까지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 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전자서명·전자관인 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해 갈 것이다.

서비스 제공체계 등 국민들의 이용불편이 많이 초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민원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작업과, 모든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털사이트 개념인 정부 대표전자민원실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은 4대 사회보험별로 피보험자 신상정보 등 공통정보를 중복 구축하여 낭비요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상호 공통성이 큰 ‘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간에 통합고지, 신상정보 연계관리·보험관련 사항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등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

축사업’은 대면접촉을 통한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으로 인한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기관별 업체등록, 기관별 조달 정보 입수로 인한 기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조달관련

내부행정절차를 혁신하고,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관련 절차를 온라인화하며, 기관별 조달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은 국세관련 신고·고지·납부 등을 위해 세무서와 은행 등 개별 기관방문으로 관련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평일 업무 시간에만 국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세의 신고·고지·납부 등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서류 발급 및 세무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양방향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

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존한 통제위주의 회계체제로 국가자산과 부채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부처별·기관별로 구축된 40여개 정보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종합적인 국가재정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곤란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자금 및 자산·부채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련 기관별 정보시스템간 정보공유·연계체제를 구현하여 예산의 편성·집행은 물론, 회계·결산 등 모든 재정관련 업무의 생산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금·벌칙금 등 국가재정수입의 전자적 고지·수납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법·제도 정비, 업무재설계 및 표준화를 통해 대폭 간소화·효율화하고, 기관간·업무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 2002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에 이를 보급 완료하여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이미 완료된 업무(10종) 외 호적 등 11종 업무의 정보화를 완료하고, 주요 민원의 인터넷 처리, 첨부서류 대폭 감축, 1회 신고로 주요 주소정보 일괄변경 등 대폭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관련기관간 교육행정정보의 전자적 유통·관리체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학사 및 교육행정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교원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작업에 의한 인사관리로 문서 작성·보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고, 인사관리의 과학화·정보화 미흡으로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다. 인사업무를 정보화하여 종이 없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전체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사운영과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사업’은 수작업에 의한 문서기안·결재 관행 상존으로 비능률이 초래되고, 기관간 문서유통시 인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문서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부 모든 문서의 작성·결재·유통·보관 등의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 기반 구축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정보교환시 기관 및 본인확인 수단이 미흡하여 중요한 전자적 정부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던 문제와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변조·훼손 우려로 전자민원·전자조달 등의 이용활성화가 저해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관간 안전한 정보유통 등 전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사

업이다.

‘범정부적 통합 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사업’은 부처별·업무별 전산환경 구축으로 인한 전산장비·인력·시설의 중복투자 발생 및 24시간 지원 체제 미흡, 자연재해·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국가 주요정보자원의 안전한 관리체제 미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운영되는 전산실의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對국민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대표전자민원실에 접속하여 개인의 경우 출생에서 사망까지, 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의 처리 절차를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받아, 대부분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안방 민원시대가 개막된다.

아울러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자동차 등의 관련대상상의 주소지도 일괄적으로 갱신되며 관공서간 컴퓨터를 통해 정

2002년 전자정부 중점추진과제를 위해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사업에 127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480억원,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275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12억원 등 10개 사업에 약 2천억원이 반영되었다.

보교류가 가능해져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 완납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對기업의 측면에서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수령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등록·변경·말소 등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종전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정보공동활용으로 1개 기관 방문으로 손쉽게 처리되고 그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對정부 측면에서는 인사·재정 등의 공통행정업무 정보화로 정부내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민원의

접수·결재·유통·보관 등 전체과정이 전자화되어 공무원이 단순반복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정책결정과 對국민 서비스질 제고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타 기관에 구축된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 방지 및 자료 불일치 제거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정부 사업은 다수 부처 연계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단순히 전산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정보화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식과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전자정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 ‘정보와 지식공유체제의 강화’와 함께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21세기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하에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 이념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2000년 10월)으로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시지역까지 연금적용을 확대(1999년 4월)하여 ‘전국민연금’을 달성하였다.

또한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후진적 의료이용 관행에서 탈피하고 의료보험의 통합(2000년 7월)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한편, 경로연금제 실시, 장애인 직업재활기반 구축, 보육아동에 대한 공보육 확대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박헌열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확충과 함께 현행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을 치밀하게 점검·보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7.2%로 보건복지 예산 확충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정

책기조하에 먼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보건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한 차원 높게 성숙·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8조245억원(추경전 당초 본예산 대비 22.1% 증액)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및 생산적 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981년 2.2%에서 2001년 6.7%까지 점차 증액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먼저,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강화하였다.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8조245억원이다. 이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그리고 생산적 복지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00년 10월)을 계기로 지난 40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단순 시혜적 생계보호 차원의 시책으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완벽하게 보호하는 한편, 놓고 먹는 복지 방지를 위해 근로유인 제공으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혁신되었다. 생활보호 급

여내용이 수급권자의 권리로서 자리잡는 한편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근로능력유무·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현재 실수급인원을 감안하여 올해 수준인 155만명을 내년예산에 계상하고,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비를 포함한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올해 18만2천원에서 내년 20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근로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자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활지원 인프라도 확충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42개소(200개소 → 242개소)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1,700명(5,500명 → 7,200명)을 증원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계

〈표 1〉 200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증감률
일반 회계	74,581 (62,727)	77,101 (77,101)	2,520 (14,374)	3.4 (22.9)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24	660	36	5.8
재정융자특별회계	815	537	-278	-34.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61	979	18	1.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9	105	-94	-47.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69	721	452	168.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1	142	11	8.2
합 계	77,580 (65,726)	80,245 (80,245)	2,665 (14,519)	3.4 (22.1)

주: 괄호 안은 일반회계 당초 본예산기준(추경전) 금액임.

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노인·장애인·영유아·아동 및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자활사업 참여 기반을 내실화하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2년 예산은 올해보다 18.7%가 늘어난 1조1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령과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로연금 대상자를 71만5

천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1인당 월 5천원 인상하여 최저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거동이 가능한 결식 재가노인에게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제공(3만4천명/일)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식 재가노인에게는 점심배달서비스(1만7천명/일)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만성신장·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 및 폐증까지 장애인 범주를 확대함에 따라 등록장애인수가 계속 늘어나고 각종 서비스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대상자를 올해 9만2천명에서 11만명으로 늘이고, 지급수준도 1인당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

상 지급한다.

특히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100명에게 1인당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시설보호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해 치과유니트를 장애인복지시설(20개소)에 지원하며, 올해부터 엘피지 특별소비세 등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장애인용 엘피지 차량 약 30만대에 대한 세금 인상분(월 1만4천원 → 2만1천원/인)을 정부부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농어촌지역 →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14만7천명 → 19만3천명)을 확대하고, 취약 결식아동에게는 석식을, 미취학 결식아동에게는 중·석식을 제공(1만5천명/일)

<표 2> 기초생활보장예산(안)

(단위: 일반회계 기준,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32,696 (28,196)	34,036 (34,036)	1,340 (5,840)	4.1 (20.7)

주: 괄호 안은 본예산기준(추경전) 금액임.

<표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안)

(단위: 억원)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자활프로그램	1,183	1,515	· 28.1% 증가
자활근로사업	600	1,203	· 일자리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
생업자금 융자	400	270	· 창업자금 등 융자(채특)
자원봉사 등	183	42	· 자원봉사(5천명) 21억원, 재활프로그램제공 등 21억원
자활인프라 구축	578	837	· 44.8% 증가
자활후견기관	141	231	· 42개소 확충(200 → 242개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7	606	· 1,700명 증원(5,500 → 7,200명), 자활계획수립 등
합 계	1,761	2,352	33.6% 증가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17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학비를 지원(2만4천명)하고, 모자복지시설 운영(57개소 →

59개소)을 지원하며,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장비(냉장고 70대, 냉동탑차 50대)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우수 종사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최저 5%에서 최대 15%까지 운영비를 인상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계기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수급대상자는 실수급인원을 감안 155만명으로 하였고,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18만2천원에서 내년 20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진흥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내년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재원 211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해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7개소와 노인전문요양시설 30개소를 신·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9개소)와 응급환자정보센터

(1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동응급의료세트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 27만명에 대해 치아홈메우기사업(22억원)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 500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13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20%인 저소득층 99만명에게 조기 무료 암검진사업(위암·유방암 검진 80억원)을 실시하고, 고액진료비부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만성신부전증·근육병·혈우병·고셔병 등 4종 7,115명 → 베체트병·크론병 등 6종 7,516명, 220억원)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원한 국

〈표 4〉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예산(안)

(단위: 일반회계 기준,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노인복지	2,997	3,760	763	25.4
장애인복지	1,839	2,200	361	19.6
영유아보육	1,705	2,085	380	22.3
아동복지	737	764	27	3.7
여성복지 및 재가모·부자가정지원*	256	180	-76	-29.6
기타 사회복지	1,013	1,159	146	14.4
합 계	8,547	10,148	1,601	18.7

주: * 선도보호시설 운영 등이 여성부로 이체됨에 따른 예산감소(-72억원)

립암센터에 암연구동을 2003년 까지 총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하여 4천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 암연구사업에도 5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암 치료의 선진화를 위해 양성자치료센터를 내년부터(100억원)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함으로써 암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전문적인 암연구와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주도산업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30.8%가 증

가한 811억원을 신약개발·의과학·휴먼의료공학 및 바이오보건의료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보험자·의약계 및 가입자의 공동노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5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중이다.

사회보험의 내실화 추진

지역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수준을 총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출추계액의 28.8%인 1조9,009억원에서 내년에는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추계액의 40%인 2조5,74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47만명)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부담보험료도 1,6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의료비지출의 절감·억제를 위해 급여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장·단기 대책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어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를 실현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소요액 중 자체 수입액을 제외한 1,626억원을 내년도 일반회계(919억원)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707억원)에서 지원하며, 내년 7월부터 연금보험요율이 5%에서 6%로 인상됨에 따라 농어민 65만명에 대해 월 4,400원의 보험료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표 5〉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기준,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보건의료	3,173	3,377	204	6.4
보건	1,748	1,727	-21	-1.2
의정 및 한방	631	721	90	14.2
보건의료기술개발	736	873	137	18.7
기관운영 등	58	56	-2	-3.4

〈표 6〉 사회보험 지원 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기준,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사회보험	29,085	28,288	-797	-2.7
	(21,731)	(28,288)	(6,557)	(30.2)
건강보험	28,207	27,365	-842	-3.0
	(20,853)	(27,365)	(6,512)	(31.2)
국민연금	878	923	45	5.1

주 : 괄호 안은 본예산기준(추경전) 금액임.

R&D 투자의 지속적 확충

미 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한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불안은 국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확신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도 정부 재정운용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연구개발 예산 전년 대비 15.8% 증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있어 연구개발(R&D) 예산은 4조 9,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가 증가하였으며 규모면에서도 6,740억원이 증가하였다. 증가율 15.8%는 전체예산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각 부문별 증가율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어



조율래
과학기술부 기획예산담당관

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시부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강조하고 2002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을 5%까지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1998년의 경우 3.6%에 불과하였던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2000년 4.0%,

2001년 4.4%로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2002년의 경우 4.6%까지 제고될 전망이다. 물론 당초 목표했던 5%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부 연구개발예산 5조원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차세대 성장기반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전체적으로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9,642억 원→1조2,035억 원)하였으며,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17.8%→19%)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위한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 산업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 (7,882억원→9,389억원)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난해 대비 16%가 증가한 1조424억원으로 예산편성상 처음으로 과학기술부 순수 연구개발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다.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

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장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 민간겸용기술개발사업, 우수연구실 및 연구리더 육성사업 등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분야별로는 생명공학, 나노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차세대 성장기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의 지속적 제고, 세계 일류상품 개발 등 산업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다.

기술과 우주기술(ST)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개발의 본격화

2001년이 생명공학 원년으로 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내년부터는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하여 본격적인 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올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지원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전자·소재·화학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간유전체기능 연구사업, 생체기능 조절물질개발사업 등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002년에는 프로테오믹스·줄기세포·생물정보학 분야 등에 2,0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명공학기술과 함께 집중 육성해 나갈 미래전략기술로 선정된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2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1,1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주요 개발분야, 기술인력양성목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으며, 민·관합동의 나노기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공동활용이 필요한 고가 연구장비·시설 등 생명공학·나노기술 분야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명공

〈표 1〉 2002년 과학기술부 예산안

	2001 예산(A)	2002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R&D	8,982	10,424	1,442	16.0
非R&D	1,031	960	-71	-6.9
합계	10,013	11,384	1,371	13.7

(단위: 억원, %)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연구 모습

학연구원의 국가유전체정보센터 설립·운영에 20억원을 지원하고,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연구장비 구축(나노 Fab)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우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 우리가 개발한 위성(100kg급)을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에는 우주센터개발사업비 255억원을 포함하여 다목적 실용위성과 발사체 개발 등에 1,0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투자 비중 확대

정부 R&D 전체예산 중 기초

연구투자 비중이 17.8%에서 19% 수준으로 확대된다.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규모는 올 2,003억원에서 20.8%가 증가된 2,42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을 창의력을 배양·창출하는 기초교육·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기초연구사업과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에 각각 984억원과 652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초의과학(醫科學) 등 중요도에 비해 낙후된 부문의 집중육성과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유명대학과의 전략적 교류 확대, 대학연구인력의 유동성 촉진 및 학·산,

학·연간 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과학관 이전·건설과
청소년 과학화 지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성숙된 과학기술문화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과학기술문화를 상징하고 2,200만 수도권 주민의 과학대중화에 기여할 세계 수준의 첨단과학관 건설이 내년부터 착수된다. 총사업비 1,855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완공계획으로 부지 5만평에 전시면적 9천평

규모로 내년에는 사업 1차년도로 기본 설계비와 일부 부지 매입비 등 총 64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청소년과학축전 등 과학문화 창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최근 저하되고 있는 이공계대학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 기반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확대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국가전략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고급두뇌의 조기발굴·육성을 위해 과학고 2개교를 과학영재고로 지정·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IMT-2000 출연금 120억원과 함께 내년 예산으로 26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올해말에 선정될 2개 과학고

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중인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분야별로는 BT·NT·ST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를 대상으로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로의 지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고급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우수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WISE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과 여자 대학지원사업 등에 69억원을 지

원하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성화

과학기술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인건비·연구비 지원을 포함한 ‘출연연

구기관 연구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지난 5월부터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비·인건비를 올해 4,087억원에서 5,038억원으로 9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288억원, 총리실 이공계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663억원)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대학생학자금 용자제도 등 연구원의 복리후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들 기관들의 연구활성화를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2〉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2001년		2002년	
	정부 전체	과기부	정부 전체	과기부
바이오기술(BT)	3,238	1,616	4,060	2,029
나노기술(NT)	434	363	1,122	1,033
계	3,672	1,979	5,182	3,075

주: 나노기술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의 투자금액 제외

원자력 안전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원자로 설계검증기술, 고성능핵연료 국산화기술, 해수담수용 중소형원자로 개발 등에 1,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 비발전 분야 육성을 위해 암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이용 오피수처리기술개발 등을 위한 ‘첨단방사선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원자력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0년 주기의 원전 종합안전성평가제도를 2002년부터 전 원전에 대하여 시행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설치한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원전의 운전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전산망 운영, 방사선 의료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방사능 방재 및 비상진료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선진기술의 국내 이전과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브라질·우크라이나·루마니아·베트남 등 신규 원자

력사업 추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확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미래형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아·태지역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간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아·태지역협력기술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며 제3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을 200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R&D투자 효율성 제고

정부는 연구개발투자 확대노력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각 부처의 연구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지향성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연구개발과제의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매년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사전조정예 연계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다음 연구기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이 실용화·산업화로 이어지는 투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어려울수록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투자하라는 기업의 생존논리가 정부 재정정책에 보편화된 지 오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민간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기초연구 및 공공복지기술 분야와 투자리스크가 큰 미래첨단연구 분야에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지속적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보다 정확한 기술예측과 연구기획을 실시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선진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과학기술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 내외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달의 초점

주5일 근무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김황조

연세대학교 상경대 교수
(h_joekim@hanmail.net)

지 난해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가장 길다는 등 여러 시각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노동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보완책 논의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와 주5일 근무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목사들은 주5일제는 십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천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고 노·사·

정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모처럼 형성된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첫째, 하나님은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노동을 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둘째, 노동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수를 받고 하는 有給勞動,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自給勞動 및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奉仕勞動이 그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유급노동에만 국한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노동에서 해방되는 하루를 자급노동 혹은 봉사노동으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활동을 전혀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십계명이 적혀있는 구약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5일 근무제를 택하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급을 받는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수가 없다. 줄어든 시간만큼 받는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낮아지는 임금의 보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노동측은 시간급 인상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임금보전을 법으로 정한 예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지난 1989~91년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할 때도,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도록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측이 한발 물러서야 될 것이다. 사용자측도 임금보전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면, 시간당 임금은 그만큼 상승하게 되며, 부족한 일손을 초과근무로 해결한다면 임금 할증급 등으로 이 역시 노동비용의 상승을 가져온다. 연·월차, 생리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둔 채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비용 상승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즉,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땅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관련된 절치적인 문제가 어려운 과제이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규모를 감안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준비기간은 두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이루어져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산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 할증률을 사용자측에서는 최초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5%로 내리자고 하며, 노동측에서는 누진 할증률까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할증률의 인하는 지금까지의 초과근무 수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더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과근로시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길다는 점과 할증률 50% 수준이 국제적으로 보아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할증률을 인상하는 것 역시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바란다.

연·월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행히 노사 모두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

의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측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 22일의 휴가를 주고 근속연수 1년당 1일을 추가하되 32일까지 주자는 것인 데 반하여, 사용자측은 근속 가산제 없이 일률적으로 15일로 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참조하여 1년 근속한 자에게 18일의 휴가를 주고, 근속연수 3년에 1일을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사 각각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지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취업규칙으로 2주 단위로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좀더 근로시간이 '탄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1개월 단위는 너무 짧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한 것은 1년 이내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 이외에도 근로시간 적용제외·특례 대상 범위 조정의 문제, 초과근무 할증임금 대신 휴가를 선택하는 문제, 유급 주휴제 유지의 문제,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나, 대승적인 시각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일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가 어려운 대목인데, 지난해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및 금융·보험업이 선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는 노사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고무적인데,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산업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엄연한 경제학 원리를 노사 모두가 다시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6개월의 준비기간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나 OECD에 속하지도 않고 또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중국이 이미 1995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주35시간제를 시작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프랑스의 경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생산성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삭감도 받아들여겠다는 자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영자 역시 근로자를 인적자원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장기

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기적인 비용 증가는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산업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엄연한 경제학 원리를 노사 모두가 다시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의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노사간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진전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와 공무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노사간 세세한 쟁점 전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사 노사 대표들이 개인적으로는 내심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도 고려하여 이제는 정부 스스로 자신의 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합리성을 노사 양측과 정치권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국민에게 선사하여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용어해설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가 2001년 정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달의 초점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anghkim@sookmyung.ac.kr)

19 26년 포드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가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이 근무방식이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윤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구미 각국에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정착된 시기는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1950년대초이다.

질적 성숙단계로의 전환기에는 주5일제 도입 요구돼

주5일제의 도입은 그 당시 획기적으로 높아진 생산력에 대한 안정적 수요의 확보와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산업사회의 질적 도약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단순히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수요의 확대라는 선택적 결과로만 볼 수 없는 경제발전론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5일 근무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숙단계로 전환

하는 시기에 도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제도적 과제이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산업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과거의 장시간 근로방식의 발전단계에서 보다 질적이고 내포적 성숙이 요구되는 단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응하는 제도 정비와 의식변화가 제대로 수반되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의 직업 및 소비생활과 관련되는 제도 및 의식을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질적 경제발전 단계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의 하나이다. 현 시점에서 주5일제 도입은 결코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도, 사회주의적 발상도 아니다. 지엽적인 이유를 들면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는 것은 보다 큰 것을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주5일제의 도입은 직업생활, 기업의 조직관리, 소비생활 패턴 등 국민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한 도입방식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분담구조가 특히 단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주5일제 도입의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균등화하기 위해서 노조·사용자·정부 등 주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주 5일제 도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원칙 준수

주5일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와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주5일제 도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주5일제 도입은 사회적 편익도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노·사·정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새 제도의 연착륙은 어렵게 된다. 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임금저하 없이 단축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휴가제도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의 월차·생리 휴가 등과 같은 복잡한 휴가 제도는 과거 저임금·장시간노동 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연·월차의 상당 부분이 휴가로 소진되지 못하고 임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장기근속자들의 경우에 법정휴가일수의 단축이 임금소득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도 휴가의 원래 목적이 임금소득 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 시대의 유산은 새로운 시간제도의 도입과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시간단축 논의과정에서 노조측이 시간단축의 주목적이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

주5일 근무제는 경제가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도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제도적 과제이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분담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이러한 패키지적 교환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현실에 천착하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5일제의 도입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업내부에서의 시간관리가 보다 합리화되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직은 물론이고 생산직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많다. 시간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자세와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윤리의 변화와 함께 근래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로 근무시간 관련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 부문 동시 시행 방안은 결코 연착륙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중소기업 쪽의 일부 주장도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용을 노·사·정이 공정하게 분담함에 따라 연착륙을 가능케 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연착륙 유도해야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합의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간제도의 개선은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합의도출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미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직도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패키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측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난해의 노·사·정의 기본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세부내용까지 모두 노사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정부 추진

안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이 지연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의 주5일 수업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으나, 많은 시민불편 등 부작용과 함께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원활한 재창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태도와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사회인프라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 몰고 나들이 다니는 소비지향적인 여가문화로는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재창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개인의 직업생애능력개발 중심의 여가문화가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문화활동에 소진되는 것이 재창조의 지름길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하면서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서울에도 아직 인구 100만명이 초과되는 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5일제 도입과 더불어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인프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책임자들의 의식전환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달 의 초 점

주5일 근무제 도입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동시에 추진돼야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최 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영계는 이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선진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은 보다 많은 여가를 선호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임금부담이 커지게 되면 장시간 근로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총론적인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의거 근로시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휴일·휴가 등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

주지하다시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근로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학교수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때문에 도입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특히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5일 근무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을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체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의 휴일·휴가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43~153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는 미국(142일)·일본(129~139일)·영국(132~137일)·독일(104일)·프랑스(145일) 등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일·휴가를 갖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각

주5일 근무제는 연간 휴일·휴가 일수 조정, 유급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선 설정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각 107~130일, 70~77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국가는 아직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선진국 및 경쟁국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며, 특히 주6일 근무를 전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급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월차휴가제도는 1953년에 도입한 것으로, 1주 6일 근무제하에서 근로자에게 주휴일 이외에 매 월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만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에 대한 과잉보호 조항으로,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이들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큰 인건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업에서 월차휴가 사용비율은 48%, 생리휴가는 45%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리휴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인도네시아 등 2개국에 있으나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유급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되어야

연차유급휴가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동 제도는 현재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기간'이라기 보다는 연공서열적·장기근속적 수당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다. 즉, 근속연수의 증가와 함께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선택하는 관행이 고착화됨으로써 동 제도는 휴가보다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선(20일)을 설정하고, 특히 사용자가 사용을 권유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기간'이라는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할증률도 인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이 50%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2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과근로 상한선의 확대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해 초과근로 상한선을 1주 12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초과근로 상한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기준은 없으나, 네덜란드·일본·스위스 등의 주당 초과근로

상한선은 15시간 이상이며, 벨기에·그리스 등에서는 주 12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에 걸맞는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렵다. 때문에 현재 실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교대제 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초과근로 상한선을 현행 주 12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고 초과근로 상한선이 주 12시간으로 유지될 경우 신규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근로 업체는 대부분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특히 대부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주당 초과근로 상한선을 한시적으로나마 16시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의 파급효과 감안해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2주·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주40시간제의 시행과 동시에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경영층에는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운용을,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조화로운 운용을 가능케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또한 이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매우 유용한 방안임이 선진 외국의 예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비적용 범위의 확대조치도

긴요하다. 관리직·행정직·전문직 근로자 등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직종은 관리 및 비용 측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적용시기에 있어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의 실근로시간은 주당 50시간을 상회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이들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2002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시간단축을 추진하였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노무비 증대 영향 크지 않다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주 5일제 도입문제가 2000년 5월 24일부터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래 평행선을 그은 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표류한 것은, 종합적인 전략 관점이 없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합의를 기다린 채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정부·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노사에게 맡기면 당연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 논의구조내에서는 당사자가 실행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타 외부압력이 들어와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노측은 노동조건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고 사측은 비용논리 속에서 접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간 논의가 노동조건 개선과 노무비 증대라는 협소한 틀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의 공식적 장이었던 노사정

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는 정부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석하고 있지만 종합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일반적 관행대로 책임있는 발언을 꺼리고 공익 위원은 노사의 중간에 서서 소극

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주요 선진국의 관행을 도입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2001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노동시간 논의가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대통령의 의지표명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의지표명 이후 언론들이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바짝 달라붙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땠든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가 더 풍부하게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정부관련 연구기관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주요 기업 연구기관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DJP공조 파기, 미국 테러사태 이후 사회분위기가 급보수화되고 냉각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논의도 잠복하는 경향이 있었고 당초 올

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뒤집어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노동시간 단축 저지의 움직임이 경제단체로부터 나타났다.

이처럼 주5일제 논의는 종합적인 전략관점의 결여 때문에 평행선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요인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은 노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과 노동체계를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미쳐질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노무비 증대 영향은 머지않아 상쇄될 것

노동시간 단축, 특히 주5일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제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첫째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나아가 주노동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주5일제의 경우 노동자뿐만 아닌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도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고령층 노동자들은 일중독이 되어 여가욕구보다는 소득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젊을수록 여가욕구가 강해진다. 또한 노동일의 단축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루의 노동시간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전보다 늘어나기는 힘든 관성적 리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일이 줄어들면 주 실노동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89년부터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노동조건 개선과 노무비 증대리는 협소한 틀 속에서 장기간 표류한 것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합의만을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국가적·공공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91년 9월 30일까지 법정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 실노동시간이 1.9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노동시간 단축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의 단축이 격주 휴무제를 촉진함으로써 즉, 노동일을 단축함으로써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같은 논리하에서 주5일제의 도입도 마찬가지로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단기적으로 기업의 노무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끊임없는 경쟁의 압력 속에서 노무비 증대의 압력을 최소화할 생산성 증대 및 원가절감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사기향상은 기업의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주5일제 도입이 노무비 증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방향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적 시나리오하에서 산출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임금 및 노동비용이 최대로 11.7%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미칠 초과노동시간 단축 등 지극히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1년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년단위 탄력근로제는 종전 법대로 하면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초래할 생산성 증가나 노동시장 변화, 고용형태의 변화 등은 고려에 넣지 않고 산출한 수치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사용자의 유연성 극대화과 노무비 절감을 보장키 위해 분단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4%대의 항상적 실업률은 내부자가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압력을 항상적으로 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구수단인 노동조합의 힘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강화공세하에서 날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비록 임금보전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보전된 임금이 미치는 노무비 증대 영향은 머지 않아 상쇄될 수밖에 없다. 신규채용자들 다수는 임금보전분을 받지 못하는 계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기존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향후의 임금조정시 평상시처럼 임금을 인상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주5일제의 도입은 파트타임이나 파견형태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무비는 더욱 삭감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자기개발 시간 늘고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주5일제 도입이 미칠 영향은 훨씬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패턴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은 매우 본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의 요구나 우리 경제

의 당면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의 경쟁질서 속에서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창의성은 지식의 폭과 깊이, 지식교환과 조직의 팀워크 조직화 등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주5일제의 도입은 자기개발 시간을 늘림으로써 21세기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다. 인적자원 이외의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2년 월드컵 개최처럼 주5일제 도입도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내수기반의 확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수출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쟁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내수기반을 확충해 가는 가운데 수출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재정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 확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5일제도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내수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주5일제 도입은 우리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가 주40시간제, 연간 1,800시간대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온 것은 이러한 대외적 사정 때문이었다. OECD에 가입했으나 아직도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으려면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 등 국제기준 이행과 함께 OECD 주요국보다 연간 실노동시간이 길게는 1천 시간이 더 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단축시키는 구체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주5일제 도입의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대한 것이다. 노무비 증대나 아니냐는 폭좁은 틀내에서 논의할 그런 것이 아니다. 노무비 증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머지 않아 상쇄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논의를 주5일제 도입의 전제 위에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그를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의 아젠다로 옮겨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주5일제가 제공할 공간이 단지 노는 시간의 증대로 끝난다면 긍정적 효과는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 전략관점 수립이 필요하다. 주5일제가 줄 여가를 어떻게 하면 창의력과 기술증대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과 인프라 구축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논의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노무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은 노무비 증대압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파트타임이나 파견 형태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므로 노무비 증대 영향은 상쇄될 것이다.

하고 사회적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주5일제가 도입되고 그 공간의 활용이 개인이나 시장에게 방치되면 결국은 주5일제가 주는 공간이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국가적이고 공공적인 방향에서 정부나 공공 부문이 주도적 입장에서 관리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용어해설



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주식 매입권을 말한다.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

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의 차이도 다르다. 그러나 최근 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져 스톡옵션에 따른 메리트가 크게 감소하거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달 의 초 점

주5일 근무제 도입

도입 시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하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stkim@kli.re.kr)

산 업화가 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교육훈련과 여가를 위한 시간 부족, 장시간 근로에 따르는 낮은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율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

축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 내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기본합의문 도출로 결실을 맺었다.

그 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대해 노사간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잇은 듯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는 양측의 입장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 주도하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전된 상황 속에서도 일반국민은 물론 학자들까지도 과연 주5일 근무제가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 심지어는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

해서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큰 원인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경기침체에 속해 있으며 향후 국제경제 전망이 밝지 못한 점에서 시작되지만, 그 근본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한 뚜렷한 그

림이 없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효과 간과해서는 안되

근로시간 단축은 경기순환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망되는 것은 주로 경영자 또는 기업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과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의 경제성장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같듯이 증폭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노동에 의존하는 비용구조에서 오는 부담이 커지고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긍정론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과장된 주장이며 임금과 노동비용의 상승은 임금보전의 방식과 향후 임금협상에 있어 인상률 완화 등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집중도의 강화, 산업재해 위험의 감소,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증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동반하는 생산성 향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상쇄시키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이 발생하여 실업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여가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내수의 증가는 국내 경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 실근로시간의 감소로 우리 근로자들에게 근로 이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런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효과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들과 비교할 때 과소평가되기 쉽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공공부문의 인프라 제공 노력과 동반될 경우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의 발전, 가족 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오는 가족 단위의 문화 생성 등 금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발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도입시키는, 경기 상승기와 침체기는 각각 노사 모두에게 역방향으로의 영향을 끼치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주6일 근무제에 맞춰진 제도적 환경을 점검·정비해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경영계가 제기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사안에 따라(case by case)'일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실용적인 대답이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도 도입하기만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경제주체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사간의 유연한 협상과 공동목표를 향한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들이 특히 사회 인프라의 측면에서 강조된다. 그 중 제도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필수 연구과제와 정책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주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과 정비, 특히 금융·의료·공익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소기업

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틀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현황 파악과 함께 그 범위와 보호의 문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융합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 및 교사 제공에 대한 방법 그리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파견근로제와 같은 인력지원업의 활성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컨설팅, 협조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모델 고안 및 파급 등)에 대한 개발과 함께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 또한 필요하다.

도입시기, 경제·사회 상황 고려하여 결정해야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 단순히 근로시간과 경기변화를 연결해 본다면 오히려 경기침체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초과근로의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이 낮고 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노동비용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기상승기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비용의 부담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인력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인력 부족의 문제가 초과근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한 방향으로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이해하여야만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주5일 근무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역방향으로 향하는 영향들에 대해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둘지, 어떤 목적을 더 중요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요약컨대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적극적 그리고 보완적인 정책들이 병행하여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선,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도 성과보상주의의 정착을 받아들이고 근무집중도와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신의 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이번엔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다. 지금의 이러한 논의가 각자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에 머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충실한 준비 작업과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도 과정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허 경 만

전 라 남 도 지 사

대담 김인철 本誌 편집장

—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국제박람회 사무국(BIE) 공인박람회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원, 부가가치 7조8천억원, 고용창출효과 23만명 등 총 2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88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등에 비해 3~4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박람회를 계기로 개최지 여수를 중심으로 한 경남 등 주변지역에는 해양관련 레저·관광·연구단지 등의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개최지 권역이 정비·개발됨으로써 이 지역이 미래형 해양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 내년 12월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 사무국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올해 5월 2일 BIE에 정식으로 유치신청

서를 제출한 나라는 우리나라·중국(상하이)·러시아(모스크바) 등 3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국인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추세와 경제 중심지이며 첨단 신도시인 상하이·푸둥 지구의 높은 인지도를 내세워 유치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수는 국제적인 인지도 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경쟁국보다는 2~3년 정도 앞선 준비와 발빠른 교섭활동으로 지지 선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나라라는 점과 함께 여수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회원국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유치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 어디를 막론하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역적 비교우위성이 높은 생물농업과 생물식품 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리도 6.25%에서 5.5%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말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더불어 수출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닥터제도'를 운영하여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



고 있습니다.

— 울촌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난 1990년 12월 현대그룹의 개발요청에 의해 279만평의 울촌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994년말부터 단지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현대자동차측이 사업비 투자를 유보하여 종합진도 53%에서 2년여 동안 단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도와 도민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 6월 22일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2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대자동차 부지의 준설도 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05년경에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불산업단지의 분양률이 32.5%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BIE 회원국 순방에 나선 許道지사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대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29만평에서 49만평으로 확대 지정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미분양용지(26천평)를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자유무역지역(34만평)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8월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 저와 토지공사 사장, 무역협회회장 등 관련되는 유관기관 15인으로 구성되는 '대불산업단지 기업유치협의회'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데, 취임 후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선 1기 이후 7년 동안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이제 어느 정도가 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완공될 서

해안고속도로와 광주-목포, 목포-광양간 등 신규 고속도로 7개 노선, 무안국제공항과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전남의 최대의 자산인 다도해와 서남해안 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해양관광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전남은 농농사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쌀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 쌀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농가의 88%인 20만6천호가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2%를 쌀농사에서 얻고 있습니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영농자금 대출을 앞선하고, 건조·보관시설 부족 농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우선 보관 후 보관료 등 제비용은 도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곡 잔량이 발생할 경우 농협 자체 매입을 확대하고 매입자금 이자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쌀 소비촉진과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쌀생산 방향은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 통합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도는 시·도 통합이 광주·전남 공

동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과거 3년 반 동안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광주시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부터 도청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광주광역시와 통합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도청 광주 존치를 조건으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이제 “도지사도 도청 이전을 고집하여 통합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측의 입장 변화에 무대응할 경우 청사 착공 후에도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논의의 기회를 가져 이전이든 통합이든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주시가 정말 통합할 의지가 있다면 도청 신청사 건축공사가 발주되는 시기(10월말)까지 시민의 의견을 모아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10월말까지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청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 도청 소재지로 추진중인 남악 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될 남악 신도시는 향후 20년 동안 약 2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447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개발할 276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등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초기 입주자를 위해 필요한 100여만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후반기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새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 '2001 세계 음식문화 대전' 개막식에서

청사는 올해 착공하여 2004년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의 건설은, 전남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동북아 해양지향적 교류기반 구축을 활성화시켜 자손만대의 풍요와 번영을 기약할 전남의 새 중심 삶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도지사로서 임기중에 이 일만은 꼭 이루 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라남도가 그동안의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2010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21세기 초유의 양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최대 관건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전국 중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동북아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남도

“아름다운 전라남도로 오십시오.”
“아껴놓은 땅 전남으로 오십시오.”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

똑같은 전남을 두고도 이처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남이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최근까지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도화지에 색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친환경 개발, 해양지향적 개발이 가능한 때문일 것이다.

전남은 신해양시대의 도래를 맞아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대륙 진출의 관문이자 대양을 향한 전진기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220만 도민 모두가 낙후와 침체를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구적인 노력을 배가한 결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21세기 ‘쾌적하고 풍요로운 동북아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지향하고 있다.



서무열
전라남도 공보관

특히 동북아의 중심지로 비약할 수 있는 구심점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3차 종합계획(2000~2020)을 수립, 목포권·광양만권·광주근교권·중남부권 등 4대 생활권별로 신산업축·해양관광축·물류축·역사문화축·내륙생태관광축 등 6대 성장축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21세기 전남 2대 프로젝트인 ‘도청 이전사업’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여 도민의 저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 신라시대에는 무주, 고려시대에는 해양도·전라도에 속해 있었으며 그후 조선시대인 1896년에 전라남도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에는 광주·목포·여수·순천부가 시로 개칭되었으며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광역시)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9년에는 100년간 광주에 있던 도청소재지를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도시로 확정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총면적은 1만1,987km²(남한면적의 12%), 인구는 214만명이다. 재정 규모는 도와 시군을 합하여 총 5조7,691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7,538억원, 특별회계 1조1,0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 이전사업 본격 추진하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전남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비약할 수 있는 구심점 확보를 위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원 447만평 중 7만평에 새청사(연건평 2만3천평)를 짓고 이를 토대로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남악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신도시는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되며, 기능상 행정업무의 중추도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겨냥한 국제교역의 중심도시, 정보·통신·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도시, 전통문화와 해양관광휴양의 거점이 되는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00~2019년이며 총사업비는 2조5,835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도청 신청사 설계와 신청사 부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말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도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시·도민들의 의견이 분열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1996년 광주광역시 10대 불가론 제시 및 시의회의 반대의결 이후 입장변화 없음)을 감안한다면 전남도의 발전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차선책이지만 도청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우리 도는 '2010년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정부에서 여수시 신항 지역을 개최후보지로 결정하고 전남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1999. 6. 14)하였다. 2010년 세계박람회는 2010년 4~10월까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게 되며 약 190개국에서 3천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생산유발 효과만으로도 17조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 23만명의 경제적 효과 중 50%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내년 12월말에 BIE 총회에서 87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는 지금까지 총 76개 BIE 회원국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긍정적인 회답을 받아 자신감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6일 프랑스가 지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아프리카권의 지지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립적 입장에 있는 많은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개최지를 희망하는 국가간·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전 국민의 유치열기와 국가적 외교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공식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중국의 상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한국 여수 등 3개국이며 마감은 오는 11월초이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중국이 2008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후보지 여수가 타 경쟁국에 비해 '중소도시'여서 인지도 면에서 뒤진다는 약점도 있지만 오히려 '중소도시에서도 박람회 개최 가능'이라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우리 측 논리가 중소국가에 어필하고 있고, 상대국보다 2~3년 앞선 준비 및 교섭활동으로 선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 중상위권 진입 목표로 SOC 확충에 주력

그동안 우리 전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어 지역 발전 기반이 되는 SOC가 열악하여 기업유치나 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전국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도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가 올해부터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수도권·영남권과의 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광주-무안간 등 이미 추진중인 7개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으며, 목포-광양간, 비아-완도간 등 11개 노선의 국도 4차로 확장(2006년까지 589km)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거점지역인 신도청소재지, 무안공항, 2010 세계박람회 후보지(여수), 중부내륙지구 등의 접근도 제고에 치중하여 국도 및 지방도(85개 선, 2,651km)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남 서남해안 일주도로(1998~2011, 793km)의 주요구간 국도 승격(제77호선)이다. 이를 계기로 전남 해양관광시대가 한 걸음 앞서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애환이 서린 호남선 복선화는 2002년에 완료하고, 전철화는 2004년 완료를 목표로 연내 공사를 착공하며 전라선의 임실-동순천간 철도개량을 2003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동순천-여수간 개량사업은 기본설계를 실시중에 있다.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은 2002년까지 완료하고, 국제무역·물류거점으로 광양 컨테이너 부두, 목포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확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에 뒤진 우리 도가 정보화마저 늦어진다면 전남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전국 최초로 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디지털네트워크혁신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내 1,969개의 도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도해테마파크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대륙 진출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미지를 살려 동북아 경제권내 국제전자상거래의 중심역

할 수 행하는 전자물류허브(중심)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남과학기술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생물산업, 정보산업, 항공우주산업, 센서산업, 전통·특화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였다. 아울러 '고흥 우주센터' 유치에 따른 관련산업·관광 등 지역적 파급 효과 극대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전남생물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藝鄉 전남'의 예술과 해양을 관광자원으로

전라남도도는 藝鄉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과 공룡화석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소치(허련), 남농(허건)으로 이어지는 남화의 고장이며, 서편제·동편제 등 전통적인 소리의 고장이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특히 1,969개에 이르는 다도해의 섬, 6,431km에 달하는 해안선은 '해양휴양관광'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문화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향수의 기회를 전도민이 공유토록 하고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세계화를 위해 '국립남도국악원', 문예회관(12개소), 공공도서관(40개소)의 건립과 문화재 보수(145건)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문화·축제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고유의 6대 문화자원(공룡박물관, 화순고인돌의 선사유적 공원화,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천연염색 문화상품 개발)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전남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2000~2009년, 1조6,239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남의 서남해안 일원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의 활로 개척

최근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이다. 쌀 문제,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중국의 WTO가입, 뉴라운드 협상 재개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농도인 전남이 무너지면 한국의 농업이 무너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격적인 농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태풍·병해충에 강한 안전 영농 체계를 확립하고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 '지역특산 브랜드 쌀'을 개발하며, '논농업직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과 친환경 농업으로 전남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연중 생산거점으로 육성(15개소, 20억원)하고, 신선도 유지 및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광양항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2001~2006,

240억원)를 설치하고 자운영 재배와 오리 농법 등 청정미 생산단지를 늘려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면이 바다인 우리 도는 어업구조 개편을 위해 불법어업과 무기산 사용 근절을 추진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자 첨단복합양식단지과 내수면어업을 개발하며, 폐염전을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1,204ha)을 설치하고, '어촌종합개발' 사업 (11권역, 89억원)과 어촌휴양단지 (2개소, 3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부실공사 추방 등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감사의 전과정을 공개하는 '공개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올 6월에 'ISO 9001'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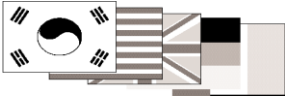
어느덧 민선 2기 4년째를 맞았다. 앞서 언급했던 역점시책과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21세기 초반에는 우리 도가 지향하는 '복지·해양·신산업·그린·개방 전남'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

〈표〉 주요 경제지표

(단위: 천명, %)

	IMF 이전(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경제활동인구	1,062	1,066	1,026	1,006
실업률	1.4	4.3	3.3	3.0
산업생산지수*	124.9	120.9	129.9	148.0
어음 부도율	0.73	1.13	0.35	0.47
소비자 물가지수*	109.9	119.3	121.4	125.6
수출(억달러)	69	77	70	

주: * 1995년을 100으로 하여 산정된 수치임.



경제통합 촉진될 유로圈

-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貨 유통

19 99년 1월 유럽연합(EU)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다국간 단일통화로 출범한 유로貨가 오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식 유통된다. 2002년 2월말까지 자국통화와 유로貨 병용기간이 지나면 개별국가의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통화통합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유로화의 경제통합 효과는 더욱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로화 현금유통 준비동향과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유로貨 현금유통 준비 순조롭게 진행

유로화는 지폐 7종, 주화 8종 등 모두 15종으로 구분·유통될 예정이다.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올해 9월 1일부터 우선 은행에 대해 유로화를 1차 보급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상점·자판기업체 등에



양돈선
駐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재경관

대한 2차 보급은 이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非유로 국가에 대하여도 지폐를 보급하는데, 유로권 중앙은행은 제3국 중앙은행에, 일반은행도 제3국 해외지점·자회사 등에 올해 12월 1일부터 유로화를 보급한다.

주화는 올해 12월 15일경부터 일반에 공급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통용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

하여 동전세트(starter kits)를 만들어 교부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20DM(10.23 Euro, 동전 20개) 단위로 판매한다. 지폐는 모든 나라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일반에 공급하며, 은행 및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교부하는데, 교환비율은 이미 국가별로 고정·운용중인 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은행구좌에 있는 금액은 자동적으로 전환된다.

유로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대체로 2개월간

각국 통화와 병용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유일한 법정통화로 통용된다. 병용기간중 은행들은 자국화로 예금을 수취하거나 유로화로 교환해 주며 상점들은 물건 대금을 자국화로도 받으나, 거스름돈은 유로화로 지급한다.

병용기간이 종료되어도 각 중앙은행들은 장기간 자국화를 유로화로 교환해 주는데,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지폐·주화 모두를 영구히, 베·네·룩스3국은 지폐를 영구히 교환해 준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또는 주 중앙은행)들은 현재 유로지역내 타국통화를 수수료 없이 자국화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동 업무는 2002년 3월까지만 수행한다.

유로화 현금 유통에 따른 부작용 크지 않을 듯

유로화 현금 유통 이후 물가상승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내기업들이 유로화 전환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로화 통용을 가격인상의 기회로 악용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유로지역에서는 상품가격이 9나 99로 끝나는 경우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컨대 0.99DM을 환산하면 0.506유로가 되나, 이를 0.59유로로 조정함으로써 인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유로화 전환에 따른 물가 및 경제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유로 출범 후 EU 경제는 실물 및 금융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현금이 유통되면 단일화폐의 활용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유로체제 정착 및 위상제고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 가계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미국 테러사건 이후 유로지역의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일화폐로 가격이 투명화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 기인한다. 오히려 환전수수료·환리스크 제거, 비용절감, 투자·자본조달 여건 개선 등 사회적 이익이 크고 신뢰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상거래에서의 혼란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 새해 첫주에 교환 및 현금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새 화폐 계산에 익숙치 않아 기차역·계산대에서 줄서기 등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독일연방은행 등 정책당국은 현재의 동전은 연말 이전에 은행에 예금하고 신규 화폐의 교부는 가급적 1월 10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조지폐 출현이나 자금세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는 1조유로 이상의 현찰이 세금추적 등을 피해 잠복되어 있고, 현재 유통중인 DM의 30~40%(650~900억DM)가 독일 이외 지역 특히 유고·터키·러시아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는 테러자금 원도 대량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분노출을 피하여 유로화로 전환되지 않고 자금세탁을 거쳐 달러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경제의 현장

또한 그동안 지하에 잠복해 있던 위폐가 유로화 전환을 앞두고 범죄조직에 의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데다 유로화 신규위폐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9월 1일 지폐 위조방지 인식표지를 발표하고, 각국 경찰·유로폴(Europole)과의 공조체제를 구축중에 있으며, EU 각국은 테러자금원 차단을 위한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각 은행들도 자금세탁 혐의 거래 신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EU경제에 많은 변화 불러올 유로화 유통

유로 출범 이후 EU경제는 실물 및 금융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유로화 현금이 유통되면 단일화폐 활용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유로 체제 정착 및 위상제고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실물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로화 출범후 지난해까지 유로경제는 성장률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된 가운데, 실업률 감소, 재정수지적자 및 정부채무 축소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상품시장 규제완화, 제조업 부문 노동력 감축, 세계개혁 등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통신분야 민영화, 역내기업

간 M&A 등 개혁으로 실업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경쟁력 제고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회원국간 임금체계 및 상품가격 차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조세부담, 기업의 열악한 자금조달·투자 여건, 지나친 사회복지제도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 슈뢰더 총리는 사회보장·노동시장·세계 부문의 개혁을 통한 사전적 기회균등,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유화 및 개인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융·자본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과 함께 통합결제시스템(TARGET)이 가동되고 단일 통화정책이 수행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단기금융시장도 급속도로 통합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2000년 9월말 유로화 표시 단기금융상품 발행액은 896억달러(전체의 31.4%)로 유로화 출범 이전의 52억달러(2.7%)에 비해 크게 신장되고, 국별 국채수익률 격차도 축소되었다. 2000년 9월말 채권발행 규모는 약 1조5,638억달러(전세계의 28.1%)로 유로화 출범 이전 3.7%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증권시장이 확대되고 회원국 증시간의 동조화가 진전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은행을 통한 직접금융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한 간접금융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유로화의 위상이 제고될 전망이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출범 이후 지속적인

〈표〉 유로화 출범 전후의 달러/유로화간 비중변화 추이

	1998년	1999년
세계무역결제 비중	달러 50%, 유럽통화 30%	달러 60%, 유로화 20%
외환거래 규모	달러/DM간 450억달러	달러/유로화간 406억달러
외환보유 비중	달러 57%, 유럽통화 13.7%*	달러 65.2%, 유로화 13%

주: * DM, 프랑스 Fr, 화란 dfl 합계액 기준

자료: 도이치 방크, 200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5

약세기조 속에, 세계무역결제·외환거래·외환보유고 비중이 출범 이전 유로권 통화의 습에도 이르지 못함으로써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위상이 높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로권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성장·금리격차가 역전되었고,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확대/유로권의 축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로권 12국은 인구 3억명(세계 1위), GDP 6조5천억달러(2위),

수출비중 12.8%(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구권까지 감안하면 유로권은 인구 5억명, GDP 8조8천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덴마크·스웨덴·영국, 스위스·노르웨이·동구권, 지중해 연안국들의 총교역의 50% 정도가 유로권과의 교역이며, 상당수 동구·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로화를 기중통화로 설정하는 등 유로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제화가 진전되고 유로화가 신뢰를 회복하면 유로화 결제 및 보유비중이 확대되고 기중통화로서의 기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럽통화동맹(EMU) 및 EU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15국 중 유로권(EMU, 유럽통화동맹)에 미가입한 덴마크·스웨덴·영국의 경우, 정부는 가입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로화 성공여부가 가입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유로화 결제 및 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유로화의 강제전환, 국제화 추이에 맞춰 확대 여부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교역·투자 측면에서도 유로권의 금융·교역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국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U 가입을 추진중인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렴 지수가 향상되고 상품·서비스 자유이동 협상도 완료하는 등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축소 및 노동력 자유이동 등에 대하여는 결론이 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도이치방크는 향후 5년 이후부터 가입이 시작되어 10년 후에는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화 출범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투명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유럽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유로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역내시장이 발달되고 유로화가 회복되면 수입수요 상승, 이에 따른 對EU 수출·투자 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유로화 위상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유로화 결제·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유로화의 강제 전환, 신뢰회복, 국제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향후 점진적 확대 및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역·투자 측면에서도 미·일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로권의 금융·교역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시장통합에 따른 가격투명성에 대비하여 EU내 국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수정하는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려면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난해 8월 중국 서부지역을 다녀왔다. 60여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서부 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그때의 출장길에 두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랐다.

하나는 중국에서 수천년간 사용해 오던 척관법을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미터법으로 전환하였고, 실생활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아직 공공기관에서도 평·자·섬 등 불법정계량 단위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상거래와 국민생활에 혼선을 주고 있는 점과 비교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인들이 서부개발에 100년이라는 세월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중국 고위관리는 “오늘의 방문이 후손들의 방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하였다. 100년의 시간대(time horizon)를 생각하는 그들의 여유에서 가슴 섬찔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가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책해 본다.

미국의 IT 과잉투자로 세계경기가 위축되더니 테러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 단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우선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장기적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 마련

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경기회복이 2분기 정도는 더 지연된다고 해도 그것은 단기적 싸이클에 불과한 문제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보다 장기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실도 상당히 정리되었고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도 진전이 많았다. 때마침 세계경제도 정보통신의 발달, 신기술의 탄생, 기술의 융합·재편 현상으로 새로운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때에 방향정립을 제대로 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느냐의 여부가 미래경쟁력 결정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먼저, 산업구조면에서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기술산업, 전통주력 제조업 그리고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식·기술·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정보통신·생명·극미세기술·환경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수출실적에서도 보듯이 자동차·조선·기계산업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들 산업 중 일정부문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IT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집약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흔히, '서비스=소비·향락'으로 이해하여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해왔고 세제·금융·재정상의 지원대상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기반 없이 제조업의 발전만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기는 불가능하며,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모든 기초·응용·산업기술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그것은 국가·산업·기업 차원 등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조직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구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적 주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주장 모두가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 4대 부문 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 이제는 규제나 지원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모든 부처가 기업·국민 등 행정수요자 측면을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성장동력의 원천이 노동·자본으로부터 지식·기술·정보로 이동해 가는 만큼 사람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급인력 한명이 수백, 수천명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

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는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다.

지난 시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기업이나 기업인이 있었고 가까이는 환란의 책임도 상당 부분 기업인이 져야 했다. 그러나 기업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업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만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기업을 아끼는 마음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우선 공직자부터 바뀌어야 할 일이다.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들이 7~8월에 걸쳐 전국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 기업규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자세가 전체 문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가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만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선 목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지만 좀더 긴 안목에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 정비



김석원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금융시스템은 자금을 잉여 부문에서 부족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중개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제 규칙(rule) 등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경제시스템하에서는 금융중개기능이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현실 경제에서는 경제주체의 위험선호도와 수익률에 따라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은

투자에 대한 선별을 통해 자금이 수익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량기업에 배분되도록 하고, 비대칭적 정보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중개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균형과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존재하게 된다. 금융시스템에서는 신용을 전제로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어떤 산업보다도 시장실패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용질서의 확립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금융규제체계는 다른 사회적 제도와 같이 형성·발전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한다. 1980~90년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통합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바젤(Basel) 등 국가간 감독기구 사이의 협

력·공조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규제체계가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금리·진입·업무영역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에 건전성 규제는 시장규율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금융규제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 금융규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양하고 중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정비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및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되, 국제적 규범에 따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기준규제를 체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규제는 자동적으로 폐기하였다. 1998~99년에 '금융규제 50% 폐지'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지나치게 복잡·다기한 금융감독관련 법규체계도 간소화하여 금융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분야에서 선진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관행이 확립되지 못하고, 금융이용자가 느끼는 규제정비 체감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관행의 존재로 인해 법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정비작업은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관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규제정비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융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등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건의도 접수하였다.

또한 금융규제를 목적별로 분류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규제정비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관행은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태스크포스의 검토작업을 거쳐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는 금융이용자의 편익제고와 관련하여 증권시장 연말휴장일(현행 3일)을 단축하여 시장참여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제반 공시제도의 완비에 따라 상장·등록 예정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인제도를 폐지토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관련하여 건전성 규제와 중복되는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상환을 완화토록 하였다.

불필요한 규제관행에 대해서

는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복보고·과도한 자료제출요구의 경우 금융감독유관기관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시장의 통합화·개방화·동조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자본이동의 속도와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재정립하여야 한다. 즉, 금융규제 정비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2단계 금융규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금융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과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

2001년 세계개편안



노형철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최 근 들어 대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4대 연금 제도의 확대시행 등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지출의 증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세계개편안 마련

소규모 개방경제하의 우리나라가 대외불안요인을 흡수하여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균형 재정 기조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같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으로 세계시장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독

일·일본 등 각국은 유리한 투자 및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각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외국보다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국가간 조세정책의 상호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낮은 세율 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세계개편은 이러한 대내외적 조세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의 큰 틀 속에서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첫째,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감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내온 계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납세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각국의 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과 중장기적 세원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균형재정 회복 뒷받침과 조세의 공정성 제고에 중점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된 올해 세계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였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하 동향에 맞추어 종합소득세율을

정부는 국민의 체감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의 조성과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중장기적 세원 확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10% 인하(10~40%→9~36%)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로우대·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는 일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특수 교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내년도에 주민세를 포함하여 약 1조7,500억원이 경감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세 부담이 약 1조2,500억원, 일인당 세 부담이 약 15% 평균 22만원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하여 약 5,100억원 경감되며 일인당 약 12%, 평균 3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신탁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

〈표 1〉 봉급생활자 급여계층별 세 부담경감 내용

(단위: 만원, %)

연간급여	현행세액	개정안		
		세액	경감액	경감률
1,800	18	12	6	33.3
2,400	52	37	15	28.8
3,600	216	186	30	13.9
4,800	426	375	51	12.0
6,000	654	576	78	11.9
10,000	1,770	1,574	196	11.1
20,000	5,467	4,889	578	10.6

주: 일반급여자 4인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공제(급여의 20% 사용)기준

하였다. 동 신탁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종업원이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어 ‘高稅率·多減免’ 구조로 운용되어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低稅率·少減免’ 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 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20~40%→9~36%)시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23%)하고, 감면은 대폭 축소하여 소득세 본래 기능을 강화하였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 일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세부담 경감하고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확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하여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47.3%→30.8%)하고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법인간의 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첫째, 투자액의 10%가 세액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수도권 투자에 대하여도 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화·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5%) 적용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중소기업의 ERP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

〈표 2〉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

(단위: 천명, 억원, %)

	인 원			근로소득세 부담			일인당 부담증가율
	1999년	2000년	증감률	1999년	2000년	증감률	
월 200만원 이하	7,675	8,274	7.8	9,572 (12.5)	5,940 (7.2)	-37.9	-42.4
월 200~400만원	1,604	2,038	27.1	23,843 (149)	27,409 (134)	14.9	-9.6
월 400만원 초과	185	288	55.7	19,183 (1,037)	26,044 (904)	35.6	-12.9

주: 괄호 안은 1인당 세부담액(만원)

서 10%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세제상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를 폐지하고, 현재 10%인 증빙불비가산세율을 2%로 인하하였다.

조세감면제도 대폭 축소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체도를 대폭 축소하였다. 연구개발투자(R&D)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 등은 현행대로

〈표 3〉 실업률 및 임금체계 변화

(단위: %, 천명, %p)

	1999년	2000년	증 감
실업률	6.3	4.1	-2.2
취업자수	20,281	21,061	780
연봉제실시업체 비율	3.6	23.0	19.4
성과배분제실시업체 비율	16.0	20.6	4.6

〈표 4〉 근로소득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총조세 대비	5.7	23.9	20.8	16.3	12.3	12.4
국세 대비	7.0	41.2	21.8	18.6	15.0	20.5
소득세 대비	37.2	62.5	83.8	76.1	87.9	59.5

〈표 5〉 GDP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단위: %)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1.3	2.3	3.3	3.5	5.4	6.1

올해 세제개편안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低稅率·少減免' 구조로 양도소득 세제의 전환,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의 확대,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각종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지하되 중복지원 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다. 또한 소득세 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률에 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으로 규정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은 규정되어 있는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들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지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흥업소에 대한 특

별소비세(20%)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원하였다.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는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

여기에서 일부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2000년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세부담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세금은 예산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세부담증가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국세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국세증가율은 43.1%이고 임금상승률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쳤다.

2000년 근로소득세가 전년실적 대비 32% 증가한 것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과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 수준 증가하였으나, 연봉 2,400만원(월 급여 2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총조세 대비 6% 이하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용어해설

발생주의회계 · 현금주의회계

기업회계의 기간손익 계산은 기간 내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여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수지에 기초를 두고 기간중에 실제로 수입 또는 지불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주의회계라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업의 활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는 데는 총수지에 의한 현금주의회계로는 부적당하므로, 현대에 이르러 발생주의회계로 발전된 것이다.

발생주의는 次期의 것을 미리 주거나 받았을 때와 전기의 것을 후에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기간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 해당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현대 기업회계의 손익은 손익발생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되며,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선 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이자 등이 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같이 기업이 행한 거래를 그 거래가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급부(재화·용역)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 아니면 반대급부(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회계사·변호사 등 役務의 제공을 주로 하는 직종에 한하여 쓰인다.

일선 농·축협의 건전 발전 도모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이양호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1년 6월 임시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여 7월 19일 국회 주최의 공청회를 거쳐 8월 2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단일 안이 마련된 이 법률은,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직후 의결되었고, 정부로 이송되어 9월 12일 공포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해 7월 1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농·축·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되고, 사외이사제·상임이사제·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부실조합 경영지도 등 일선 농·축협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일선 농·축협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사전에 일선 농·축협의 부실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협동조합 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국민과 농업인, 일선조합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앙회 및 일선 농·축협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일선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 및 부실정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 10~11월 금융감독원·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1,388개 일선 농·축협 중에서 재무제표상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209개 부실 일선 농·축협의 경영상황을 실사하였다. 그 결과 169개 일선 농·축협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조합으로 판명되었고, 그 부실액은 7,09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1998년 이후 부실이 계속 증가되어온 이들 169개 조합은 당기결손이 1998년 -418억원에서 1999년 -1,392억원, 2000년에는 -2,73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어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실의 확대로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조합들이 파산할 경우 수십년간 애써 모아온 조합원들의 출자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선 농·축협이 부실예방 및 정리를 위한 제도적·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내년중 부실로 판명된 169개 조합을 포함한 부실 일선 농·축협을 정상화·합병·청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 없어지고, 파산조합에 예금한 농업인과 농촌지역주민들의 예금 지급도 정지되어 다른 건실한 농·축협의 신뢰하락 등 협동조합의 신뢰저하와 더불어 국가와 농촌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가 우려된다.

일선 농·축협의 건전육성 토대 마련

이번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일선 농·축협의 부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인력·조직 감축, 출자금 증대 등을 통해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여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부실이 심각한 조합 중 합병의 실익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명령을 통해 인근의 우량조합과 합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실규모가 크고 합병도 어려워져 청산이 불가피한 조합에 대해서는 예금·대출계약의 인근 조합 이전, 미곡종합처리장(RPC)·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경제사업장의 인근 조합 양도 등을 통해 조합원의 계속적인 사업이용 및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부장관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게 된다.

둘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부실의 정도에 따라 조직·인력 감축 등 경영정상화 조치,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임직원 문책, 조합출자금 증대, 청산이 불가피한 조합에 대한 사업양도·계약이전·합병 등 적기시정조치를 제도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행 농협법상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일선 농·축협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의 예금과 공제계약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부실조합 결정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합장 및 국회·농민단체 추천전문가, 농림부·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소속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조합의 계약이전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부실한 일선 농·축협 본격 정리

농협중앙회는 169개 조합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6일 「농업협동조합의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병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38개 부실 일선 농·축협에 대해 합병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69개 부실 일선 농·축협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지사무소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였다. 169개 부실 일선 농·축협들은 이러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올해말까지 인력·지사무소 감축 등 구조조정과 부실채권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선 농·축협 부실예방 및 정리를 위한 제도적·법적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169개 부실조합을 포함하여 부실 상태인 일선 농·축협의 본격적인 정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별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성과와 2001년 결산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169개 부실조합을 포함한 부실 일선 농·축협에 대해 정상화·합병·청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2002년중에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산대상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이전·사업양도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을 12월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중앙회내에 '일선 농·축협 구조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검토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 설립, 부실 농·축협 구조조정방안 마련 등 세부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선 농·축협의 부실이 우려될 경우 인력·조직 감축 등을 통해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이 심한 조합 중 합병의 실익이 있는 조합은 우량조합과 합병, 청산이 불가피한 조합은 예금·대출 계약의 인근 조합 이전 등을 통해 예금자보호가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농업금융 여건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과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보격차 해소로 ‘디지털 복지사회’를



류수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세 계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무한한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혁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는 앞서가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사회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0년말 현재 전국 144개 주요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고, 2001년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를 경제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생활 속의 정보화’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정부격차 해소 종합계획’ 마련

정보화의 진전과정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정보혁명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점

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사회의 소외계층인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부터 외면되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시 소외계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보이용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개인적으로 직업선택의 제약과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갈등과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의 공급 제한과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UN·OECD·G-8 정상회담 등 국제기구들은 1999년부터 국가간·국가내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 외국은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정보화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해 왔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1천만명 국민 정보화 교육계획(2000~2002)'을 수립하여 주부·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의 결과, 지역별·소득별·성별 정보격차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학력별·연령별·직업별 정보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디지털 복지사회’ 건설이 목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 1.16)하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범부처적인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

정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01~2005년간 약 2조3,0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하에 ①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②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③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 제공 및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 실시 ④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필요한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통신인프라 정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

<표 1> 국내 정보격차 현황

(단위 : 2001년 6월말 기준, %)

	학력	연령	직업	지역	소득	성
최고 이용층 이용률	대학생 98.0	7~19세 87.6	화이트칼라 78.3	서울 58.2	250만원 이상 63.0	남성 58.7
최저 이용층 이용률	중졸 이하 3.4	50대 이상 7.3	생산직 4.5	충남 37.6	150만원 미만 38.7	여성 44.6
격 차	94.6	80.3	73.8	20.6	24.3	14.1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양질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등 정보소외지역에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2005년까지 총 1조1,300억원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민영화(2002년 예정) 이후에도 2005년까지 고비용·저수익 지역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간·도서지역은 비경제성·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유선지상망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성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여 ADSL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고, 양방향 위성인터넷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화형 다채널 위성방송기술,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등 디지털 TV 방송을 위한 기술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노인 등이 디지털 TV방송을 통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확충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과 신체적인 장애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및 장애인에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까지 전국의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무료인터넷 이용시설이 미설치된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에 2001~2003년간 840개소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기관에 300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어촌지역에는 936개소의 어촌정보사랑방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 대하여 2003년까지 PC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2003~2005년간 2만7천여명의 저소득 모·부자가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PC방 등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모자복지시설에 PC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민간업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어촌 지역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5년까지 농어가 PC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연간 1만대 규모의 중고 PC 보급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총괄적으로 연구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점자입출력 장치, 음성의 문자·수화 변환 장치 등 정보통신 입출력 장치를 연차적으로 개발하

〈표 2〉 읍·면 지역 초고속가입자망 구축 계획

	전 체	2000년 현황	2001년 목표	2002년 이후
읍지역	200	131	69	-
면지역	1,223	55	698	470

주: 2002년 이후 추진계획은 정보화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고, 2001~2003년간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단어의 뜻을 듣거나 점자로 출력할 수 있는 전자국어사전을 개발·보급하며,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 및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모든 국민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02년까지 '1천만명 정보화교육 계획(2000~2002)'에 따른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정보화교육도 추가로 실시하며, 2003년 이후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인터넷 기초교육에서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까지 확대하여 생산적 복지와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그리고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강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정보화 교육 수료자에게 전문교육과정 안내 및 취업안내 등을 위해 정보화교육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이용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이 활용할 콘텐츠가 부족할 경우 정보화가 주는 혜택은 미흡할 것이므로 이들 정보소외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2003년까지 전국 읍·면·동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이 설치되며, 인터넷 기초교육 및 정보활용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정보소외계층별로 필요한 콘텐츠가 개발·보급된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재활정보·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는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여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인 복지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물정보망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농업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2005년까지 2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가격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기술·주산지 동향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터넷방송도 실시하고, 어민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국립수산물진흥원 및 전국의 28개 수산물기술관리소에 기술지도·수산정보를 제공하는 어업인 신지식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2001년에 소상공인의 창업·노하우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2001년에 3개의 조합 B2B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한 후 2003년까지 30개 조합으로 확대하며 2003년까지 50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법·제도 정비 및 국가간 개발협력 추진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한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이다.

2001년도중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 접근 편의를 위해 통신기기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이 관련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시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서 권고적 성격의 '정보통신접근성 보장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령도 정보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적극 동참하면서 신규 정보통신 시장개척을 위하여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부터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사업비를 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종전의 개도국 연수생 초청 사업, IT봉사단 파견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개도국의 IT분야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사업과 물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범국민 운동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정보격차 실태조사 외에 정보소외계층별로 특화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격차 해

소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미비점 등을 향후 정책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과 민간의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행사 등에 정보격차 해소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2005년간 약 2조3,0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정된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기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정보격차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정보격차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등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이 그만큼 크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보격차 문제를 국가 정보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과학고 2개교를 영재학교로 전환



김차동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장

우 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교육 정책의 틀 속에서 뛰어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아시아 국가 중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은 일본 7회, 중국 5회, 인도 1회, 파키스탄 1회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일본이 1965년 두번째 노벨물리학상을 받았을 때의 GDP 대비 R&D투자비는 1.6%, R&D인력은 11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를 우리나라의 1999년도 통계(2.6%, 15만명 수준)와 비교해 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한 사람이 수만명을 먹여살리는 지식정보시대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사람, 남이 해놓지 않은 새로운 것에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창의성과 수월성 위주의 영재교육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2002년 3월 시행

과학영재학교 설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는 바로 2000년초 제정되어 2002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이다.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안)은 해당분야 관계부처 장관의 영재학교 설립, 기존학교의 영재학교 전환, 영재학교의 조건·교원·교육운영 및 수업 등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체계를 뛰어넘어 영재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방안을 확정된 바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중 2개교를 선정,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이후 영재학교로 지정·전환하고, 나머지 과학고도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는 대학 및 대학 이후까지 영재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졸업생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장래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국가전략 분야 기술개발(IT·BT·NT 등)의 핵심역군으로 성장하게 하여 세계 일류 과학기술대국을 건

정부는 전국의 과학고 중 2개교를 선정,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이후 영재학교로 지정·전환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는 '협약에 의한 영재학교 운영' 방식 도입, 선발상 연령제한 탈피, 다단계 방식으로 영재 선발, 맞춤형 수업과 개인연구로 창의성 신장, KAIST 등에 특례입학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설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협약에 의한 영재학교 운영」 방식 도입

정부는 전국의 과학고 16개교 중 2개교를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과 영재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는 '협약에 의한 영재학교 운영'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방식의 학교운영은 중앙정부가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교육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영국 보수당 정권시절에 실시된 바 있는 '교부금 자치 학교'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학교운영의 요체는 협약당사자가 될 과기부와 교육청이 동의하고 협력하는 일이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해당 교육청이 영재학교의 학생선발·교육과정·교원임용 등에 있어 실질적 영재교육 실시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 과기부는 이러한 영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교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협약서에는 학생모집범위·모집방법·영재판별 등 학생선

발, 교과과정·수업 등 교육운영, 교원 구성, 운영기구 설치 등과 함께 과기부의 지원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육 및 학사 운영은 기존의 과학고와 크게 다르다(〈표〉 참조).

선발상 연령제한 탈피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재 선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학생선발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모집범위를 해당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슈리퍼 교수는 지적호기심과 능력이 최고에 달하는 나이는 8~14세라고 했다.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수년 만에 1~2명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영재성이 탁월하게 돋보이는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영재판별 방법은 다양하면서도 다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는 영재판별에 있어 3단계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과학분야 실질물, 학교의 수학·과학성 등을 평가하여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실험실습 평가, 창의성 테스트 등을 통하여 1.5배수로 압축시키고, 그 후 합숙 과학창의력캠프에서 과제물수행능력을 관찰·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 이러한 영재판별법은 영재학교 입학에 위한 속진식 사교육이 별 효과가 없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우리도 이러한 판별법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식 수업과 개인연구로 창의성 신장

영재학교 학생은 별도로 특별히 전문가에 의

하여 개발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재를 이용하여 기초·심화·개인연구·사사교육에 이르는 특수 교과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실험실습 및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또 교과과목 중 수학과 과학의 비율을 약 70%로 하고, 동일한 과목내에서도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다양화를 통하여 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년구별이 없는 맞춤형 수업을 지향하게 된다. 기초 및 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연구원 및 대학교수에게 사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재학교에서 이수한 고급과정에 대해서는 KAIST 등 대학에 진학후 대학에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조기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AP(Advanced Placement)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재학교의 국제화 촉진하고
KAIST 등에 특례입학 보장

영재학교 학생들이 국제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동안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을 탐방하고 외국의 영재학교와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하여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노벨상 수상 석학과 저명 과학자 초청강연 및 이들과의 대화의 광장 등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게 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에 달려있다. 영재학교 교원은 단계적으로 교

원의 50% 이상을 박사 학위 소지자로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의 경우 전원을 박사학위자로 구성하며, KAIST 등 우수 이공계 대학 교수를 겸직교수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학중 코네티컷대, 퍼듀대 영재센터 등 해외 우수 영재교육기관에 연수·파견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대학입시 준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영재교육 성공의 기본조건이다. 영재학교 학생은 졸업후 KAIST

〈표〉 과학영재학교 교육운영의 특징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영재교육진흥법」
학생선발	· 수학·과학 성적 우수자 · 경시대회 입상자 · 중학교졸업 인정자	· 다양한 영재관별법 · 과학영재센터와 연계 · 연령제한 없음이 원칙
교육과정	· 교육과정기준 준수 · 일반교과과정+수학·과학 20% 정도 추가	· 필수과목 최소화 · 다양한 선택과목 · 수학·과학의 강화(70%) · 최신 전자교재
수업	· 학년별 반편성 · 대입 학습	· 능력·적성별 맞춤형수업 · 국제사이버 강의 병행 · AP과정, 사사교육 실시
교원	·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 50% 이상 석·박사학위 · 외국인교사, 계약직전문가 · 대학교수 겸직
진학	· 입시제도 변화에 민감 · 수능, 내신, 특별전형	· 해외유학 · KAIST 등 특별전형 확대
기타		· 영어 생활화 · 해외 영재학교와 교환학생 제도 도입 · 국내외 석학 초청 대화

정부는 2003년 3월 개교할 영재학교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장비 및 기자재를 확충하고, 영재용 교재개발 및 교원연구비를 지원하며, 영재학교 교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14개 과학고에도 영재학교의 교육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등에 특례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도로서의 길을 연속적으로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재학 중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여 미래 과학자로서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첨단장비 · 기자재, 교재개발, 교원연구비 지원하고 영재교육 확산

정부는 첫째, 질 높은 과학영재교육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첨단장비 및 과학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 둘째, 수학과 과학, 정보·컴퓨터 과목에 대한 온라인(전자교재) 및 오프라인 영재용 교재개발을 지원하며 셋째, 우수한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와 교육(Research and Education: R&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넷째, 영재학교 교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재학교로 전환되지 않는 나머지 과학고에 대하여도 첨단장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원연수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교육운영, 노하우 및 온라인 교재들도 과학고에 동시에 전과·적용시켜 영재학교의 교육을 과학고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운영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전국의 과학고를 모두 영재학교로 전환케 하는 자국 체 및 건인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영재교육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국가 과학영재교육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고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과학영재학교 2003년 3월 개교

과학영재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재학교의 소속이 과학기술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영재교육에 대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영재교육의 철학과 식견이 보이지 않는 교육청은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모든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과학고와 학부모들의 바램만큼 해당 교육감의 지원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부에서는 영재학교 입학에 위한 과외가 과열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영재학교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영재학교의 선발방법은 속진식 과외 등 사교육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만에 하나 영재성이 없는 학생이 입학했다고 가정해도 영재학교 교과과정상 적응이 힘들 것이며 도중에 일반학교로 옮겨가기 쉽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학교관계자·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

과기부는 10월중 협약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첨단 과학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원하여 2002년 4월까지 영재학교로 지정·전환시키며, 과도기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준비를 충실히 하여 2003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 영재학교로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로 예산 절감

도병균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재무관리과장

‘제3차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 혁신사례로
뽐혀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한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의한 물자조달’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인

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부의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는 지난해에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전국의 8개 체신청 및 시·군·구 단위의 우체국 등 240여 관서에서 수백 종류의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 시행중에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2000년도 예산절약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관계직원에게 총 1억여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고 2001년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정사업의 경영개선 노력의 하나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추진

정보통신부는 전국의 3천여 우체국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우편과 우체국금융 등 우정사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를 발족시켰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고도화, 신상품의 개발, 우정사업의 종합 정보화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오고 있다.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품구매제도는 이러한 우정사업의 경영개선 노력과 사회 제반영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물결의 하나로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정사업은 사업원가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종류가 다양한 우정사업의 물품은 중앙·지방·현지 조달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물품의 적기 구매·보급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조달과 현지조달로 집중 구매되고 있다. 우정사

업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우체국 창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우편과 금융업무에 필요하며 각종 소모품 등 물품의 종류가 수백여 종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대부분 구매단가가 크게 높지 않은 편이나 연간 물품구매 예산은 1천5백억원에 이르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 부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조달계약 관련 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조달계약은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있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는 특별한 절차없이 간단한 견적서의 첨부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기존의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직접 대면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져 구매원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조리의 발생 여지가 있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현행법상 적용 가능범위를 검토한 결과 전문성 등을 요하는 시설공사 및 용역을 제외한 물품구매 업무 중 수의계약 대상인 3천만원 이하의 기성화된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 10월 정부기관으로서 최초로 인터넷에 의한 역경매제도를 도입 추진하였다.

먼저 1 단계로 가전제품, 사무기기 및 소모품 등 제조를 요하지 않는 물품을 위주로 하여 지방관서

중 8개 체신청 산하 33개 우체국에서 1개월간에 걸쳐 30여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2000년 11월 1일 전국의 시·군·구 단위인 240여개 총괄우체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였다.

역경매시의 구매사이트로 우리 부 자체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과 기존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옥션(auction.co.kr), 바이엔조이(buynjoy.com) 및 야후(yahoo.co.kr) 등의 경매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역경매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효과적으로 극복

인터넷 역경매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주로 논의된 것은 크게 법적 근거 및 실질적 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첫째, 현행법상 정부조달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동산의 매각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인터넷에 의한 역경매제도를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역경매를 제한하는 규정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행이 곤란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정부조달계약의 입법취지가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경쟁계약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점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의 출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설득하였다.

둘째, 기존의 수의계약시에는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 역경매에 의한 물품구매시 전자적 서류를 견적서 대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법률상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기존의 수의계약에 의한 견적서는 인터넷 역경매의 경우 「전자상거래기본법」 제5조에 의거 공급업체별로 제시한 전자적 가격명세를 견적서 대용으로 첨부토록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셋째, 역경매 시행시 덤핑 등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정부부처간 견해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물품납품시 구매관서에서 종전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보다 더 철저한 검수 등을 통하여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규모가 작은 읍·면·동 단위의 우체국 등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또는 금액이 적은 경우 응찰업체가 없을 수 있어 역경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소규모 우체국 등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관할 총괄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총괄우체국내에서도 구매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인근 총괄우체국 단위별로 묶어 공동 구매토록 하였다.

인터넷역경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매와 역경매의 개념 및 입찰과 역경매의 개념 등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역경매의 대상은 3

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의 물품으로서 일반 쇼핑물과는 달리 공급자가 다수인 데 반하여 수요자는 1인이며 입찰에 비하여 투찰금액은 공개되고 투찰기회는 제한이 없다.

먼저 구매부서에서는 인터넷상의 옥션·바이엔조이·야후 등 경매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다음 구매품목을 선정한다.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원하는 물품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선정하되 해당 물품이 없을 경우 품명 및 규격 등을 임의로 입력한다.

그 다음 대금지급조건 및 납품장소 등을 입력한 후 경매요청을 하게되면 공급 희망업체가 참여하게 되고 마감시간에 마감을 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업무는 낙찰자 결정까지만 해당되며 경매사이트 접속시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공급업체가 경매관련 업체에게 낙찰금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기타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납품과 검수 및 대금지급 등은 현행 구매절차와 같다.

인터넷 역경매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로 구매원가를 절감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역경

〈표〉 인터넷 역경매에 의한 구매사례

(단위: 개, 천원, %)

	인터넷 구매 전(A)			인터넷 구매 후(B)			절약액(A-B)	절감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프린터 토너	10	200	2,000	10	117	1,170	830	41.5
집배원 방한장갑(벌)	2,113	12.5	26,413	2,113	5.5	11,622	14,791	56.0
비디오테이프	2,000	3.2	6,400	2,000	1.8	3,600	2,800	43.8
업무용 가방	300	144	43,200	300	52.8	15,840	27,360	63.3

매제도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예상액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절감률은 20%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절감가능액은 연간 최고 7,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역경매제도는 물품공급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을 촉진하게 되며, 회계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각종 부조리의 개선성이 해소될 수 있다.

셋째, 물품구매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이 촉진되고 B2G 촉진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넷째, 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역경매제도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2000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사례 중 모범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구매예산 절감에 기여한 우정사업본부 관계직원들에게 총 1억 4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단일건으로 보나 개인별로 보나 성과금 지급금액 중 최고금액이다.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 달성

아울러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위주로 공공기관에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혁신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우수 혁신사례 보고대회가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 역경매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민단체, 기업인 및 학계인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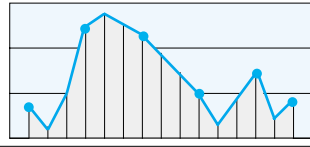
앞으로 인터넷 역경매에 의한 구매제도를 전국

관서별로 구매품목의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품목수 확대를 위한 제도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확산은 물론 각종 회의·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인터넷 역경매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요인의 하나인 수의계약 한도액(현행 3천만원 이하)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역경매 구매제도를 법규상으로 제도화하여 이 제도가 범정부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여성부·국가보훈처·강남구청·한국전력·도시철도공사 등 6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기관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0월 도입·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역경매제도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품구매 경비의 절감,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체 및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육성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보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행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예산절감, 생산성 향상 및 관련산업의 육성 등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역경매에 의한 물자조달이야말로 전자정부하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되며 향후 동 제도가 정부기관,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더 나아가 민간기업에까지 도입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테러사태로 美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는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자긍심으로 가득찼던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테러사태는 미국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의 회복에도 큰 상처를 입혔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미국경제 어려워질 듯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리)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태는 미국경제에 불확실성을 확산시켜 경기를 침체(필자 주 :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경우를 지칭하는바, 미국경제는 3/4분기 및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미국경제는 경기침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 및 투자 심리의 변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며, 각 경제주체들

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사태의 해결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은 급속히 냉각된다. 즉, 투자 심리의 위축은 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을 통해 그 영향이 실물부문에 전파되며, 소비심리의 위축은 개인소비지출과 그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내 5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미국경제의 소비심리를 대변하는 소비자신뢰지수는 테러사태가 일어난 9월 전월 대비 14.4% 크게 하락하여 1992년 7월 이후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9월 수치는 9·11 테러사태를 전후로 조사되어, 테러사태가 소비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실업인구의 급증 역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들어 4.2% 이상이던 실업률은 8월 4.9%로 급등하였고, 9·11 테러사태 이후 실업보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최근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개인소비지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최근 통계 : 8월) 위축된 소비심리가 개인소비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으나, 그동안 미국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오던 것이 개인소비지출이었기 때문에 최근 소비심리 위축이

사태 장기화되면 L자형 경기침체 지속될 전망

9·11 테러사태가 조기 수습된다면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단기 외부충격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전의 경우 경제의 기본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그 효과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미국경제는 2002년 1.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0~91년 일어난 걸프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국제원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9월 17일 주식시장이 재개하자마자 다우존스 지수는 7.13%, 나스닥 지수는 6.83% 각각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테러사태가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미국경제를 악화시킬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이지만, 향후 전망은 미국의 보복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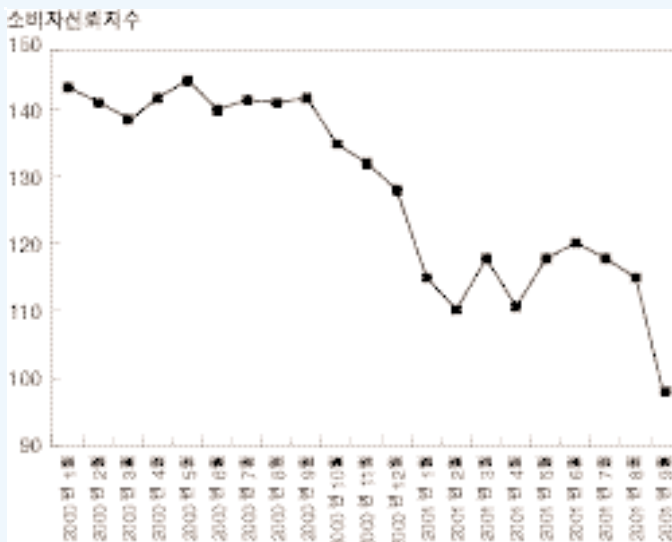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33개국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어 국제금융시장 및 원유시장은 급속히 안정되었고 미국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걸프전이 경기둔화 초기에 발생한 반면, 9·11 테러사태는 미국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발생하여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 3/4분기 및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미국경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테러사태가 조기에 수습된다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 등에 의해 미국경제는 내년 2/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

〈그림〉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자료 : Bloomberg

포한 상태이고 작전명 역시 ‘항구적 자유 작전 (Operation Enduring Freedom)’이라 명명되어, 장기전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사태해결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경제는 L자형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조기 수습된다면 9·11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단기 외부충격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전의 경우 미국경제의 기본구조 (Fundamental)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그 효과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미국경제는 2002년 1.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한 미국 정책당국의 대응이다. 먼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주식시장이 재개하던 날 아침, 미 연준리

는 비정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소집하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 정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p 추가 인하하였다. 이러한 연준리의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아홉번째 취해진 조치로서 실물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미 의회는 400억달러 지출예산안을 가결하여 피해대비 경제적 보조금(보험금 포함) 비율이 91.7%에 이르러, 과거 재해에 비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과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대대적인 추가 재정지출(최고 750억달러)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준비중이다. 이와 같은 미 정부의 노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전쟁’ 발발로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표〉 최근 상황과 걸프전의 유사점 및 차이점(경제상황 중심)

		걸프전	최근 상황
차이점	사태발생 직전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1990년 2/4분기: 1.2%	2001년 2/4분기: 2.5%
	사태발생 시점의 연준리 금리정책	고금리(8.0%)	저금리(3.5%)
	사태발생 후 연준리 첫 금리인하 시점	88일 (8.2~10.29: 0.25%p)	6일(9.11~9.17: 0.5%p)
	사태발생전 연간 생산성 증가율	1989년: 0.75%	2000년: 2.92%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경기 하강기에 발생 (그러나 걸프전은 경기하강 초기에 발생한 반면, 9·11 테러사태는 경기둔화기 중반에 발생) ·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 사태발생 직후 금융시장 불안(주가 급락, 달러 약세) · 사태발생 직후 국제원유가 급등 		

이번 보복전쟁으로 인한 국방산업의 特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IT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한편 유통·항공·금융 등 서비스산업은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초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정보기술(IT)산업은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분야에 걸쳐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군수산업의 부분적 특수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 국채 이자율에 대한 악영향, 재정수지 적자 반전 가능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IT산업의 경기는 이번 보복전쟁의 전개과정보

다는 새로운 기술(예를 들면 무선 인터넷, 3G 무선이동통신)의 상업화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국방산업 회복 예상되나 서비스 산업에는 큰 타격

이번 테러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유통·항공·금융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방산업의 회복이 예상되나, 보복전쟁에 따른 손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산업의 산업생산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미국의 국방산업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걸프전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데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보복전쟁으로 인해 군수산업의 경기는 최근 수년보다 나아질 것이나, 누리게 될 특수는 제한적일 것이며 1980년대와 같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유통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비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항공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항공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보험업계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일부 보험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보험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조업의 경우 9·11 테러사태 발생 이전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향후 경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심리에 좌우될 것이다.

한국통신공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서기관

본 심결사례는 한국통신이 자신의 전화 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 가입자 전화번호의 통합수록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2001년 3월 31일 하나로통신의 가입자를 한국통신 가입자와 통합하여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한 사건이다.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의 금지 내용 및 근거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이때 ‘거래’란 물자·자금·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도 그 거절이 의미있는 경우에는 거래에 포함된

다[필자 주 : 신문발행본사가 신문판매점에 제공하는 본지의 공급도 거래에 해당되며, 점포신설시 자금원조가 관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점포신설을 단념할 정도인 경우 그 자금원조의 거절 또한 거래거절에 해당된다(최진욱,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71쪽, 1997)].

‘거래상대방’도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배송은 소매업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나 제조업자의 의사로 당해 소매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거래거절이 성립한다.

‘거절’과 관련하여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체결한 신규 거래계약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으나, 처음부터 아예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거래신청의 거절이 과연 위법한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거래거절이 표면상의 이유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쟁제한적

인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단순히 '거래거절' 그 자체만을 규제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 제한까지 '거래거절'로 보는 것은 거래거절의 범위를 좀더 넓게 봄으로써 '경쟁배제 또는 경쟁제한 효과'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필자 주 :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도 포함된다)와 공동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는데 사업자 단체를 통한 집단보이코트가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필자 주 : 이 경우 사업자 단체 금지규정인 법 제26조 제 1항 제 3호 즉,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거래거절에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배경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해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간접 거래거절이 있다. 이러한 간접 거래거절의 경우 상대방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하도록 구속이나 명백한 강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그 거래거절을 실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1~8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제 1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법 제24조), 매출액의 100분

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법 제25조).

사건의 개요

한국전화번호부(주)는 전화번호부를 인명부전화번호부·상호부전화번호부·업종부전화번호부 등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는바, 이 가운데 '인명부전화번호부'와 '상호부전화번호부'는 한국통신을 발행명으로 하고 있고, '업종부전화번호부'는 한국전화번호부(주)를 발행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화번호부(주)의 2대주주로서 자신의 전화가입자정보를 한국전화번호부(주)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한국전화번호부(주)의 '업종부전화번호부' 발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1999년 10월 종합적인 번호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한국전화번호부(주)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업종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도 통합수록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전화번호부는 한국통신 고객만을 별도로 수록·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전화번호부(주)로 하여금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업종부전화번호부' 통합수록을 거절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은 2000년 1월 및 5월 자신이 발행명의자인 '인명부전화번호부' 및 '상호부전화번호부'에 대하여 하나로통신(주)이 요구한 '사업자구분 없이 가입자의 가나다순 통합수록'과 '전화번호부

의 한국통신 및 하나로통신(주) 공동명의 발행'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자 구분없는 수록 불가 및 한국통신 명의만으로서의 발행을 주장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통합수록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한편, 시내전화시장은 한국통신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1997년 6월 하나로통신(주)이 새로운 시내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4월 상용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0년말 현재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시장의 98.2%를 점유함으로써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고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의 시장점유율은 1.8%에 불과하여 절대적 열위상태에 있다(〈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조치

'거래거절'은 그로 인해 상대방사업자의 구매나 생산 등 원활한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등 경쟁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거래자유의 원칙상 모든 거래거절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거래거절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경우 즉,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설정된 기준 또는 자격에 미달된 경우의 거래거절이라든지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거래거절의 경우(필자 주 : 광고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합치하지 않는 것의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거절상대방의 경쟁행동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거래상대방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위법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필자 주 : 대형할인점으로부터의 부당한 행사비용 요청이나 강요판매에 대해 중소 납품업자가 이를 공동으로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각사에 대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는 거래상대방의 판매능력·신용도나 대금지불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거절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거래거절이라고 해도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 즉, 거래처 선택에 관한 통상적인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래거절을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거래상대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래거절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거절이 명백한 경쟁배제효과나 경쟁제한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합리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필자 주 : 과도한 경쟁억제, 예컨대 법상 위반이 되는 부담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래거절은 처음부터 위법이라기보다 독점적 지위를 형성, 강화할 명백한

〈표〉 시내전화시장의 점유율 현황(2000년말)

(단위: 천명, %)

	한국통신	하나로통신(주)	계
가입자수	20,789	372	21,161
시장점유율	98.2	1.8	100

이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특정사업자의 배제를 위한 공동의 거래거절과 같이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등에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거래거절은 우선 '거래거절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다음으로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본 사례에 있어서 먼저 거래거절의 행위유무를 살펴보면, 한국통신이 한국전화번호부(주)가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업종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통합수록을 반대한 것은 결국 한국전화번호부(주)에 대하여 2대주주의 지위 및 자신의 전화가입자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시내전화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된다(간접 거절행위).

또한 한국통신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상호부전화번호부' 및 '인명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이 요청한 '가입자 통합수록'을 사실상 반대한 것도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과의 거래개시를 직접 거절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거절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전화번호부 통합수록이 한국통신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고 오히려 전화번호부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통신의 거래거절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즉, 한국통신이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의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전화

번호부 통합수록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시내전화시장에 있어서 가입자간에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화번호부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되고, 특히 신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의 경우 시내전화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하여 자신의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전화번호부를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전화번호부의 활용도 면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존사업자의 전화번호부에 자신의 가입자를 통합수록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한국통신이 그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의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이를 행하게 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의 가입자와 통합하여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3D’ 용어사용 부적절하다

조영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중 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金德培)는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D 용어의 사용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현재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직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통용되는 ‘3D’가 정확한 개념도 아니고 특정업종이나 심지어 중소기업 전체를 폄하하는 의미로 잘못 사용됨으로써, 산업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취업희망자들의 중소기업 기피성향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3D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왜 부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3D 용어 사용의 자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원래 어원은 일본의 ‘3K’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3D’는 ‘어렵고(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더러운(Dirty)’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1990년대초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던 ‘3K’가 변형된 것인데, ‘3K’는 위험(키켄), 더러움(키타나이), 힘들다(키즈이)라는 일본어 히라카나의 이니셜을 합성한 조어이다.

주지하듯이 일본경제는 전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내 부족인력의 외국인 대체를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첫번째 인력부족 현상은 농촌인력의 수혈·유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다소 완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지속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근로자들이 건설·인쇄·제분업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첫번째와 달리 매우 구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력부족업종의 기피요인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3K’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3D’는 일본의 ‘3K’를 영어 이니셜로 바꾸어 원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확하고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 도시화의 급진전, 노동시장의 분절현상 심화 등으로 1980년대말부터 기피직종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3저 호황과 더불어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제조업 인력의 유출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조정에 의해 인력수요구조도 변화되었다. 그 결과 전산업의 인력부족률이 1991년의 경우 5.48%를 기록하고, 생산 및 관련직종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인력부족률의 2배 수준인 9%를 상회하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반 국내 부족인력의 외국인 대체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인력부족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3D’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3D’는 직종뿐만 아니라 특정업종 또는 중소기업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혼용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3~4개 업종을 지칭하던 것이 최근에는 10여개 업종을 ‘3D 업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혐오직종(dirty work)에 관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 국제적으로 ‘3D’에 대한 통념화된 정의는 없다. 연구 논문에서도 3D의 요소를 모두 다룬 연구는 없으며, 혐오직종에 관한 연구만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verett Hughes(1951)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직업이나 직무를 혐오직종(dirty work)으로 표현하였으며, Ashforth와 Kreiner(1999)는 Hughes의 정의와 그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물리적·도덕적·사회적 측면의 혐오직종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 측면의 혐오직종은 쓰레기·죽음·폐수·유해환경·육체노동 관련 직업으로 도축업자·광부·장 의사·치과의사 등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의 혐오직종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타인의 시중을 드는 업무로 교도관·구두닦이 등이다. 도덕적 측면의 혐오직종은 죄악, 떳떳하지 못한 일 또는 사기성이 짙고 불법적이며, 전통적 가치에 위배되는 업무방식을 갖는 직업으로 퇴폐공연 무희·채무 수금원·도박장 경영자·고문경찰관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인 W. R. Bohning(1994)은 소득 및 교육 수준의 향상, 도시화의 진전, 노동시장 이분화 등에 의해 어느 경제·산업에서도 취업을 기피하는 직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피직종(비선호직종, undesired jobs)’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3D나 3K라는 개념은 위험하고 어려운 직종이 기피직종인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피직종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1994년 UNDP의 재정지원으로 수행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인력난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통용되는 ‘3D’라는 개념은 정확성이 부족하며, 모든 산업·직종·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피직종(또는 비선호업종)’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3D’라는 개념은 경제·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기피성향이 증대하는 직업적 특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엄밀한 구분 없이 남용되어 특정 업종 전체, 제조업 전반을 폄하하는 용어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지난 5~6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국민공모에서도 ‘3D 업종’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부정적 선입견 주는 ‘3D’ 용어사용 피해야

세계적으로 산업화 역사를 돌이켜보면, 최초의 기피직종은 농업인 셈이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에서 순차적으로 기피직종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종에 기피직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3D’라는 개념

이 특정업종에 국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 종류의 직업내에서도 일의 성질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나 공정이 다양하고 상이할 수 있으며, 일의 위험성·난이도가 높은 직종이 고임금 직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럽고, 어렵고, 힘든’ 직업적 성격은 모든 업종에 내포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기피직종으로 불리우는 염색직종내에도 색배합기술자와 같은 고임금 기술자가 존재하며, 의사라는 선호직업 속에도 기피전공이 존재한다. 어느 특정산업의 생산공정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된다 하더라도 공정내 상대적 기피공정이나 작업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다. 즉, ‘3D’라는 개념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3D 업종’이 어렵고(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더러운(Dirty) 업종군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그 업종의 범위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한 일부

분석자료에서 중소기업, 특히 일부 특정업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어의 정확성과 사용상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업군’, ‘생산현장 인력부족’ 등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단지 표현상의 편의성 때문이라면 그로 인한 부정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3D업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희망자들의 선입견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3D’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